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Contents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I. '진짜 대한민국' 건설비전 11

1. 회복·성장·행복 비전	12
▪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13
▪ 3대 비전 설명	14
2. 5대 강국 비전	15
▪ 5대 강국 설명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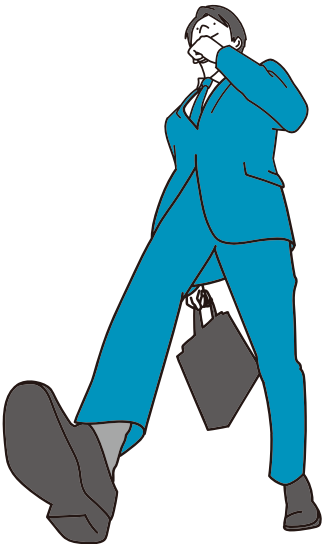
II. '진짜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17

▪ '진짜성장' 개념도	19
▪ '진짜성장' 전략	20
▪ '진짜성장' 5대 과제	21

III. 3대 비전별 정책공약 29

1. 회복	30
2. 성장	100
3. 행복	234

IV. 대상별 공약 345



I

‘진짜 대한민국’ 건설비전

1. 회복·성장·행복 비전
2. 5대 강국 비전

1. 회복·성장·행복 비전

-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회복

- 1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2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 3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성장

- 4 AI등 신산업 집중육성
- 5 성장 기반 구축
- 6 공정경제
- 7 국가균형발전
- 8 기후위기대응

행복

- 9 생활안정
- 10 생활비절감대책
- 11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 12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 13 저출생·고령화 대응
- 14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 15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

3대 비전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회복 · 성장 · 행복’ 3대 비전을 바탕으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회복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불법계엄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성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행복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내수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감한 지원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탄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 5대 강국 비전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실현으로 ‘5대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K-이니셔티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습니다. ABCDEF(AI, 바이오 · 헬스케어, 콘텐츠 · 문화, 방위산업 · 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지수 5,000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군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경제 ·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AI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군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달성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하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창작공간과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문학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통합하는 정치로 K-민주주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정치보복 관행을 타파하고 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불법 계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국 3특’ 중심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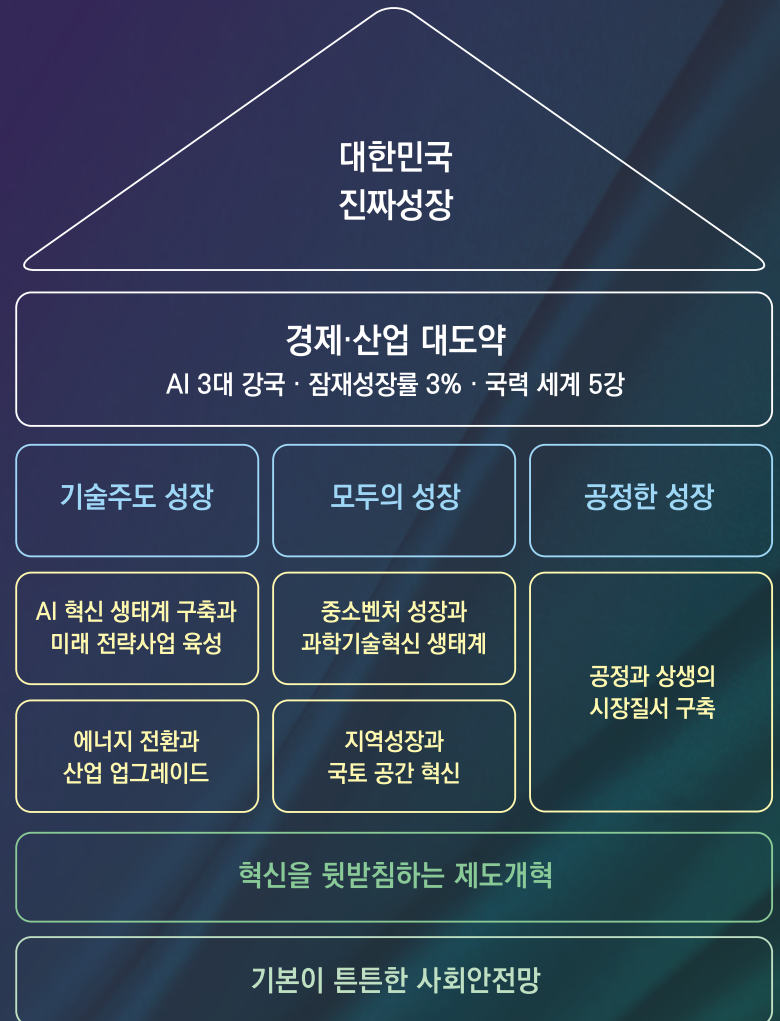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과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II

‘진짜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1. ‘진짜성장’ 개념도
2. ‘진짜성장’ 전략
3. ‘진짜성장’ 5대 과제

1. '진짜성장' 개념도



2. '진짜성장' 전략

성장 브랜드 : 대한민국 진짜성장

-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성장, 반짝성장이 아니라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
-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차지하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체감형 성장

비전 : 경제 · 산업 대도약

- AI 3대 강국 · 잠재(진짜)성장률 3% · 국력 5강
 - 현재: AI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 6~12위

3대 전략 :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 기술주도 성장(기업영역)
 - 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글로벌(G) 산업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산업 대도약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산업·수출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
 -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의 탄력성을 강화
- 모두의 성장 : 대기업, 특정지역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비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
- 공정한 성장 : 지대추구와 갑의 횡포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로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
=> 성장 유인의 제고

3. '진짜성장' 5대 과제

대한민국 진짜성장 5대 과제

1대 과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2대 과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3대 과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4대 과제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5대 과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5대 전략

1.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 ①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추진 122
- ②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102
- ③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AI 3강의 기반을 마련 108
- ④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 구축 105
- ⑤ AI 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104
- ⑥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법·제도 마련 106
- ⑦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 110
- ⑧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미래교육 강화 109
- ⑨ ‘모두의 AI’ 국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추진 111
- ⑩ 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107
- ⑪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112
- ⑫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집중 114
- ⑬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 실현 115
- ⑭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 확대 116
- ⑮ 한류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118
- ⑯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 143
- ⑰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145
- ⑱ 방송·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70
- ⑲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 실현 120
- ⑳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안보 기반 구축 126
- ㉑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128
- ㉒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사업 미래 성장동력 추진 147

5대 전략

2.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①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216
- ②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214
- ③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218
- ④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20
- ⑤ 노후 생산기반을 리모델링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공간으로 전환 152
- ⑥ 햇빛소득마를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하고 에너지 자립 실현 223
- ⑦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탄소농업 전환 224
- ⑧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 225
- ⑨ 국가가 책임지고 청정한 우리 바다 수호 227
- ⑩ 탈(脫) 플라스틱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저장고 프로젝트’ 추진 228
- ⑪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229
- ⑫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강력 추진 230
- ⑬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232



5대 전략

3.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 ①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136
- ②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137
- ③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138
- ④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142
- ⑤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139
- ⑥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적극 지원 141
- ⑦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부담 경감 146
- ⑧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 151
- ⑨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추진 153
- ⑩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 154
- ⑪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134
- ⑫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적극 조성 133
- ⑬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132
- ⑭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획기적 증진 135
- ⑮ 안정적 R&D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R&D의 지속성 담보 131

5대 전략

4.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 ①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137
- ②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138
- ③ 북극항로 진출 거점 집중 육성 148
- ④ 조선업의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 실현 150
- ⑤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 대책 마련 155
- ⑥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추진 259



5대 전략

5.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①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확대	164
② 기술 탈취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165
③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제값대로 받는 공정경제 추진	163
④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168
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166
⑥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선도국으로 발전	167
⑦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구축	169
⑧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2
⑨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	173
⑩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174
⑪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175
⑫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주식시장 활력 회복	176
⑬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육성	177
⑭ 청년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 제고	178
⑮ 사회적 경제 지원으로 풀뿌리 지역경제 조성	156
⑯ ESG 기업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	157
⑰ 공공기관의 선도적 ESG 경영 지원	158
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강화	159
⑲ 국제감면을 법정한도 준수	160
⑳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확보	161
㉑ 국민이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제도 개선	179



III

3대 비전별 정책공약

1. 회복
2. 성장
3. 행복



회 복

1.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2.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3.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1.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 ② 더이상 불법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③ 국민을 위한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 ④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⑤ 위기의 민주주의, 개헌으로 지키겠습니다
- ⑥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 ⑦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⑧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⑨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⑩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⑪ 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⑫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⑬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습니다
- ⑭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⑮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⑯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⑰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 ⑱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3대 비전별 정책공약 - 회복

- 19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20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1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 22 대통령 경호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23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24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5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 2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습니다
- 27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8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01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 구축

- 상설 실무 지원기구 설치, 합의절차 규정 마련 등 제도화 기반 구축
-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절차 도입

■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구성 다변화
- 위원회에서 도출한 정책 제안이 행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 갈등 현안에 대해 공론화 절차 및 중재 조정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대화와 타협·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기반 구축

■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민원의 신속 처리

더이상 불법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계엄법을 개정하여 계엄선포 시 국회의 기능 보장
 -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절차 구체화
 - 계엄 시 국회 활동 방해 금지 및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여 보장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불이행시 계엄해제 간주, 계엄관련 사항의 국회보고 등
- 계엄사령관의 권한 명확화
 - 비상계엄 시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 계엄포고령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
-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권 축소
 - 비상계엄 하에서 인정되는 군사재판권의 대상 축소
 - 계엄해제 후 재판관할 이전의 예외 삭제 등

국민을 위한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 국방 문민화 추진
 - 국방부장관 문민화 등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
- 군 정보기관 개혁
 - 12.3 내란혐의종사자 엄벌
 - 12.3 내란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
 -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각군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
 -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
 -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화 및 경비능력 강화
 - 국회가 행정권력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국회경비대 독립
-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 강화
 - 국회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설립 추진
 - 국회의원 징계에 벌과금 신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주민소환 요건 개선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마련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및 확정·개표 요건 완화

위기의 민주주의, 개헌으로 지키겠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및 국정운영의 안정 도모
-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입법화
 -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 확대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 및 재판연구원의 1심 재판부 배치
 -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범위 확대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 법관평가제도 개선
 -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하급심 판결문에 대해서도 공개범위 확대
-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대법관 증원
 -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권력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
 -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벌금 형량 강화
 -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제도 법제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로 사적 이익추구 차단
 -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 명확화
 -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법인·단체 범위를 현행 ‘재직여부’ 기준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지분보유 등)’ 기준으로 확대
 -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이해충돌 직무 강행 시, 즉각 직무배제 및 벌칙 도입 등 공직자의 의도적 이해충돌방지 의무 회피 행위 처벌 강화
- 공익신고 절차 간소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 활성화
- 고위공직자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추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 방식 개선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강화
 -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 중립 의무 강화
-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 공영방송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
- 공영방송의 공적기능과 역할을 명확화
 - 공영방송의 정의 및 책무 등의 명확화 및 개별 공영방송법 정비
 - 공영방송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 촉진
 -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방송 등 방송의 공익성 강화
 - 공적 지분 보유 또는 공적 자금 지원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강화
 -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노·사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법제화
 -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권한의 명문화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방송미디어의 자율 심의 기능 강화 및 신뢰성 회복
 - 방송미디어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 기능 강화
 -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보도 윤리 지침 준수 및 설명책임 강화
- 극우·선동·혐오·차별 등 반헌법적,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필터버블 및 분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선택 권리 보장
- AI시대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강화
 -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마련
 -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창작 윤리 및 법률 교육 지원·확대
 - 찾아가는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확대, 지역 미디어 센터 확대 및 시설 확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도 전면 개편
 - 법률상 제한 이외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부분 전면 개정

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학교 정규교육 내 시민·경제교육·노동교육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계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교사 연수 확대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학교 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 우리 사회에 당면한 현상과 문제에 대한 토론 교육을 활성화
 -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 활성화
-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
 - 체험·토론형 헌법교육 프로그램 및 모의의회·모의헌법재판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헌법교육 교사연수 및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노동교육 추진
 - 찾아가는 금융·노동교육 확대 등 대학진학, 출산, 퇴직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활성화
 - 금융기관 정년퇴직 직원을 활용하여 교육 서비스 확대(현재 금융기관이 정년퇴직 직원 재고용 시 급여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 추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 역사교육 강화
 -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함양
 - 허위정보·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확대
- 삭감된 역사·영토·인권 연구 예산 복원
 - 역사 관련 국제 홍보(PR) 사업 우선 지원
 -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구축 확대
-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추진
 - 연구기관의 학문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습니다

-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의 통합 개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 위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가칭)’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전면 개정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보수체계 제도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표준감사시간 도출체계 참고
- 변호사 징계권한을 별도 독립위원회에 부여
-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등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 명문화
-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 확대
 - 형사사건은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민사사건에 한해 민사 국선변호인 시범 도입
- 사법절차의 공정성 확대
 - 진술녹취제도,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 사건피해자의 진술권 강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 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

- 인권친화적 감사 체계 구축
 - 감사원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제 도입
 -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에 선별추출원칙 도입
- 국민눈높이에 맞게 법제도 개선
 -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
 -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제 시범 도입(버스전용차선 위반)
 - 벌금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 상향
 - 사면심사의 합리성·객관성 강화(사면심사위원회 권한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확대
-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완전한 청산절차 추진
 - 일본 출연금 잔여재산 문제 조속한 해결
- 국가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치 추진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전시 여성인권 문제를 위한 국제적 연대 등 종합적 추진체계 설립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민주성 제고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회의 시 민간위원 2/3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방지
 - 운영위원회 개의 전 충분한 시일 확보를 통해 안건의 졸속 의결 방지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의견 공청회 도입
 - 기재부장관 추천 운영위원 구성 시 법에 열거된 분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의무화
- * 현행(공운법 제9조제1항): ①기재부장관(위원장), 차관급②국무조정실, ③기재부, ④행안부, ⑤권익위, ⑥인사혁신처, ⑦주무기관, 기재부장관 추천(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11인 이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제한
 - 재정 집행 시 회계·기금 간 자금 전입·전출 요건 강화 통해 재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심의 강화
 -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지양
 - 예비비 사용 국회 보고 강화를 통해 방만한 예비비 사용 지양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국유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 및 국회 심의 강화
 -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 시 정부 심의 강화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우량 자산 및 기회 제공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
 -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예산안 국회 심의 실효성 제고
 -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제반 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 내실화
 -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 명확화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리 강화
 - 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대주주 변경, 보유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국회 보고
 - 주요 공공기관 재무성과관리 결과 및 분석 내용 국회 보고
- 공공기관의 공공성 관련 재무성과 분석 강화
 - 구분회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책임경영 확립 및 방만 경영 방지
 - * 구분회계는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① 기관 ‘고유사업’ ② 정부 ‘정책사업’ ③ 법령에 의한 ‘대행·위탁사업’으로 구분. 현행 법령 상 구분회계 도입 기관은 중장기재무계획 수립 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지정기관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
 -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상한(연임 포함)을 임명 시의 대통령 잔여 임기 내로 제한
 - 공공기관 임원 보수 결정 시 기본연봉에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경영의 책임성 강화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개편
 -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
 -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플랫폼 구축
 -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이력 추적
 - 초·중등학교,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교육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 체계 마련
 - 교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사·반복 업무의 AI 활용 추진

대통령 경호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 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통령 경호지원인력(군, 경찰) 감축
 - 군과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민생치안에 환원
-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변경
 -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 경호처 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 경호처 내부감사관에 외부인사 임명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시민사회대표 참여 보장
-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
 -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 국가인권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위원의 당연직화
-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개시, 고발여부 등 포함
- 감사원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명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 숙의 기반의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 등 시민참여 기반 제도화
 - 회의록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화를 통한 정책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강화
 -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 개최 정례화
- 다양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 기능 복원
 - 국가교육위원회의 집행기능과 사무범위를 고려하여 정원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확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
 -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여야 합의 절차 마련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인사청문회 도입
 -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습니다

-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주정부와 함께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
- 노근리 사건, 여수·순천 사건, 간토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 보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 국방 시기술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
 - 병력감소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모집 방식 다양화 및 부대구조·지휘구조 개편
 - 여군 비율 확대
 - 국방 사이버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통합방호능력 강화
 - 전군 C4I연동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합동작전능력 향상
- 육·해·공군 현행 3군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4군체제로 개편
 -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
- 불공정한 진급체계 및 보직 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계급, 출신, 보직별로 관행화된 인사체계 혁파
 -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 신설 및 통폐합
-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군무원 인사·복지정책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 군 방호벽 철거

2.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 1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2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습니다
- 3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4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6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 7 해양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8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으로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 9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 10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11 외교체제를 혁신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12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여권행정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 13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 14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15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 16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경제외교 역량 강화
 - G20, G7등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
 -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 위상 제고
 -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구축 추진
 - 경제안보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 주요국과의 양자, 소다자 경제안보 대화 등 협의체 적극 참여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신기술,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 주요국간 핵심·신기술 협력 논의 주도
 - 인공지능(AI), 우주, 양자기술(퀀텀) 등 세계적인 선도기술 지원과 국제사회 논의 적극 참여
-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상시 민관 공동 대응체계 마련
 -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 4단체 대표 포함 가칭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
-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전진기지화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습니다

-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 심화
 -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하여 지역협력 강화
 -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인도와의 특별 동반자 관계 심화
 -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 EU 및 유럽지역과의 실질협력 강화
 - 개방적 글로벌 통상 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 모색
 - 기후위기, 사이버안보, 인도주의, 인권 등 글로벌 이슈 분야 협력 강화
 - 첨단 과학기술, 공급망, 방산, 인프라,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확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

-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 신성장·고부가 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중장기 수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시장수요 창출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 기술·부가가치 중심의 무역구조 전환 및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
- 신흥 수출시장 개척,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탄소국경조정(CBAM)·RE100·ESG경영 등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
- 철강 등 탄소다배출 업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강화로 수출애로 최소화
-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전문무역상사('24년 기준, 601개사 지정)를 통한 수출초보기업 역량 강화

국익 최우선·극대화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통상과 무역으로 얻은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익 최우선의 통상
- 첨단·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를 만드는 통상 추진
-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로 우리 산업 및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 국내산업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양자·다자간 FTA 지속 확대로 경제영토 확장
- 대미투자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 지원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 첨단전략산업·핵심광물보유국들과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적극 활용
- 아프리카·글로벌사우스, 자원보유국 등과의 수출·투자·공급망·핵심광물 다변화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국내에서 최종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
 - 특히, 국가대향전화 되고 있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일정요건 하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 환급도 검토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K-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를 위해 세관 인적·물적 역량 확충
-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 재발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무역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기업의 자본시장 교란행위(허위수출,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범죄(사기·배임·횡령) 등 관련범죄 수사 강화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 핵심에너지 운송에 대한 국적선박 이용률 70% 이상 유지
 - 원유, LNG, 석탄, 철광석 등 핵심에너지 국적선사 적취율 70% 이상 유지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화주의 의무 및 수급안정 이용 비율 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
- 핵심에너지 수송 선사 및 선박의 해외 매각 방지 추진
 - 핵심에너지의 수송 선사 및 전략물자 선박의 해외매각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해외 매각 금지조항 규정 신설
- 핵심에너지 수송 선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방지

해양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해기사 전문 폴리텍 육성 및 해양교육기관을 통한 우수인력 육성
 - 해양금융, 해양경찰, 물류, 관세, 출입국 등 특성화 교육 집중화
 - 북극항로 대비 극지해기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해기사 직업매력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
 - 해양계 교육기관, 해사고교, 해양대학교, 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강화
 - 내·외항 선원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추진
- 우수 외국인 해기사 훈련·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장기체류 지원
 - 해외 현지 해기사 양성기관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K-class) 운영 추진
 - 한국 상선대 승선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 등 기준 완화
 - 해상분야 운송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1,000명 유지하여 국적해기사 양성체계 구축
 - 해양인력의 역할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체복무제 개선방안」(‘19.11) 적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감축(현행 1,000명→800명) 제외 추진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으로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 준법조업 확행 및 강화 방안 마련
 - 현행 담보금(무허가 최대 3억원) 상향 검토
 - 비밀어창 운영(신흥 지능범죄) 등을 통한 조업일지 부실기재 시 담보금 부과기준 신설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변·개조, 표출정보 불법 복제 등 적발 시 국내 담보금 부과기준 신설 추진
 - 한·중 양국의 이중 처벌 효과를 담보하는 직접인계인수 확대(자국 어업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 침범 및 특정해역 조업, 공무집행 방해>을 직접인계인수 대상에 포함)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 피해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 담보금 재원으로 피해 어업인(어선·어구·시설물 등) 원상회복, 복지 지원(생계비·치료비·교육비) 등 활용
-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감시·감독 강화 및 외교채널을 통한 대응 강화
 - 정부 단속역량 강화(어업지도선·해경 함정·단속장비·단속인력 증원 등)
 - 중국 정부 차원의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강구하도록 실효적인 외교 노력 강화
-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심해 양식 구조물 무단 설치 등 해양 불법 점유 행태에 대한 강력 대응방안 마련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동맹으로 발전
 - 호혜적 관계에 기반 한·미간 경제,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수준 강화
 - 관세, 방위비분담 등 트럼프 행정부 발 현안 타결에 적극 대응
 - 군사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공유, 인적교류, 공동연구개발 등 실질협력 지속강화
-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 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 지속
 -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유지·발전을 위해 한·일간 협의·협력 긴밀화
 -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지속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 다양한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정례화를 통한 역내 협력 강화
-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 한·러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을 적극 보호
 -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 회복
-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확대
 - 민주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평화, 안보, 인권, 민주주의 분야 규범 형성 및 가치확산 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 확대
-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 추진
 -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협상 및 다양한 협의체에 적극 참여
 - 새로운 기후위기대응 산업 육성 추진
-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로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
 - 최저개발국 지원 확대 등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
 - 빈곤과 불평등 완화, 인권증진, 기후·보건·식량·분쟁 등 인도주의 위기 대응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공공외교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하드파워와 K-컬처 등 소프트파워, 민주 헌정 위기 극복 등 K-민주주의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
 - 대상 국가와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문화공공외교 추진
 -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확대
 - 디지털,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

외교체제를 혁신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외 정책 결정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안보 체제 혁신
- 국가안보실의 조직 및 인력구조 혁신으로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 외교부 조직,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를 혁신하고 외교관 전문성과 역량 향상
- 외교관련 여야대표 회동 정례화 등 초당적 의사소통 제도화
- 해외 순방 시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 위주 순방외교 구현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여권행정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 재외국민 보호의 인적, 제도적 기반의 지속적인 강화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와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
 - 한글학교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연수 및 장학사업 확대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강화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로 동포사회 상호간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재외동포 민간외교 활동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강화
 -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유치·정착 프로그램 확대·강화
- 재외동포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의성 제고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와 여권행정서비스 개선
 - 사증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의 확대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편의 증진
 - 여권 사무대행기관 확대, 온라인 서비스의 민간개방확대로 여권행정서비스 개선
-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절차 간소화 및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연장 등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 한미협약과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및 북미협상 촉진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추진
-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추구
 - 우선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 단계적 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 촉진
- 북한 비핵화 진전을 추동하는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 병행 추구
- 비핵화 및 긴장완화 추진을 위해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병행
-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미중 4자 협의체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 4자 및 남북미중러일 6자 협력을 가동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 추구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남북대화 추진
-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 추진
-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 복원
-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추진
-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등을 감안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와 협력 제고, 대국민 소통,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추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회적 대화 역할 강화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한반도 전역 24시간 감시 '군사' 위성체계 구축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대북 억제능력 강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남북 양자 및 다자간 군사외교 복원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우발적 충돌 억제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
-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다자협력 추진
-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 모색
 - DMZ 남쪽지역 평화걷기 추진
- 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 교류협력 기반 유지
- 하나원 프로그램 개편, 심리상담·고용지원 강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강화
-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3.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 1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2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3 경찰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4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여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5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겠습니다
- 6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 7 신속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8 최신 소방장비를 도입하고 화재안전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 9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재난 예측 및 감시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 10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11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1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13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14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15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16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한 제도적 예방조치 강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마련
 -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 기능 강화
 - 불법 촬영물의 삭제, 수사, 법률·의료지원 기능 원스톱 체계 고도화
 -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관련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유형화
 - 성폭력, 신체적 폭행, 정서적·물리적 통제 등 사건 유형의 세분화, 성별 등 통계지표 마련
 - 교제살인 등 강력범죄화 예방과 차단을 위한 선행 범죄 분석 등 종합적 통계 분석과 대응 마련
-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조성
 -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단계적 확대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 인력 증원
 -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등 시스템 구축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보호수용 시설 확충 및 사회정착 지원 확대
-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재범률 조사 실시
 - 감호위탁 제도 개선
 - 소년법 전담 보호관찰소 운영 및 보호관찰 인력 확충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 음주 관련 범죄 근절
 - 공공 업무종사자 음주측정 의무화
 - 주취 폭력 등 처벌 강화

- 첨단 기술 악용 범죄 엄단
 - 피싱, 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범 처벌 강화
 -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명예훼손 등 처벌 강화
-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자율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활성화 근거 마련

경찰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흉악범죄 통계 작성 및 AI 분석이 가능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호신용 경봉 등 지급 확대
- 경찰의 현장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예산 확대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여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민생파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 법원 확정판결 시 범죄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의무화
-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현재 2천만 원 이하)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유튜브·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기만행위 근절
-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사기신고 이력 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 구축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겠습니다

-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견지
 -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의 Fuller금융회사 확대 적용 검토
-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
-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 근절
 -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평가항목의 과도한 세분화 및 수익성 편중 문제 해소
 -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한도 차등화 방안 마련 검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정부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
-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재난관리·대응 법령 제정
 - 사회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의 사전 관리방안 마련 및 대응 의무 부여, 정부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 마련
 -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신속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에 신속 대응
 - 소방수요 및 긴급구조통제단장 역할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신속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본부장 산하 중간 직제 신설

최신 소방장비를 도입하고 화재안전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 개발·보급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 확충 및 지원
- 노약자·어린이 등 화재 취약계층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 지원
-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 도입 및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유 확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재난 예측 및 감시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난안전제품 기술력 향상 및 수출 지원 확대
-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산불·호우·싱크홀 등 재난 예측 및 감시시스템 도입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스쿨존에서 통학로로 어린이 보호구역 선택과 집중,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및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 안전 강화 등)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구매시 지원 확대 등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 마련
- 안전한 전기차 활성화,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등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제정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 및 공항시설에 대한 항공안전투자·정비 등 점검 강화
 - 항공 및 철도사고 등 조사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
 - 공항시설 내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방안 마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 강화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근로자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 IoT 등 스마트기술과 로봇,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반복되는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싱크홀, 포트홀 등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하안전 관리 점검 강화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및 위험지역의 건축기준·시공방법 별도 마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참사를 ▲조기발견 ▲신속대응 ▲장기치료 할 지원체계마련
-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 환경호르몬 같은 심각한 독성물질의 신속한 퇴출 추진
- 산업단지 주변 발생 악취의 독성물질 함유 확인과 배출물질 관리·감독 강화 추진
- ‘환경성질환’(現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새집증후군)을 확대하여 초기치료 가능하도록 사전예방적 행정 추진
- 불법유통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인체 유해 화학물질 유통 관리 강화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AI 홍수예측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258개소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시설 설치
 - 홍수예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홍수예보 확대 추진
- 산사태 사전예측시스템 강화 및 신속한 정보 제공
 - 기상청 ↔ 산림청 간 협업으로 산사태 사전 예보 시간 단축
- 지진 감지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추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
 - 공탁제 도입으로 평가대행사업자(1종, 2종:생태계조사)간 책임소재 명확화 및 거짓 부실조사 사전예방
 - 평가대행사업자 전문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 산정 현실화와 부당한 대행비 지급 금지
- 환경영향평가에 신기술 도입으로 접근성·신뢰성·객관성 제고
 - 디지털트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신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교권 보호 강화
 -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 강화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사 마음돌봄 휴가 신설
-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 학부모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 학교 안전 강화
 -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 딥페이크 범죄 집중 모니터링 및 예방중심의 교육 강화
 -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폭력·범죄 안전대책 마련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AI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 망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 전환 추진
 -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부과
 -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 추진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중대 피해 예상시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 의무화
- 범정부 차원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일원화와 유기적 협력 위한 방안 강구
 - 능동적 사이버보안 대응기술 개발 및 정기적 합동훈련을 통한 협력 대응체계의 고도화 및 법제도 마련
 -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민·관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이버 보안기술 다양성 확보 및 핵심기술 국산화 지원
 - 민간 주도의 보안제품 표준 및 인증기준 수립을 통한 기술변화 대응력 강화
 - 민간 참여 보장을 위한 인증·표준화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법제화

- 지역 및 중소기업 등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
 - 지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로 지역의 보안산업과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보안서비스(SeCaaS) 시장 확대 지원
 - 지역 영세기업 대상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등 확대
-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안전 대응 강화
 - AI 기술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적극 대응 및 근절
 - 스미싱 근절을 위한 문자중계 통신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의무 강화 및 발송자 처벌 강화
 - 실생활 속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양방향 스마트 안심번호 제도’ 활성화
 - 주말, 연휴 등 취약 시간·기간 피해 방지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2

성 장

1.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2. 성장 기반 구축
3. 공정경제
4. 국가균형발전
5. 기후위기 대응

1.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 ①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② AI 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 ③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④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⑤ 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⑥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AI 3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⑦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⑧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⑨ 국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⑩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⑪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 ⑫ 글로벌 소프트웨어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⑬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 ⑭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⑮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으로 만들겠습니다
- ⑯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경제안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AX : AI Transformation

■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 촉진,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 기반 조성
-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 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

■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 거대언어모델(LLM)·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 육성

■ AIoT·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 AIoT 기반 신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 분야 발굴·육성
- 공공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적극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클라우드 전환 촉진 지원

■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활용 격차 해소

- AI 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 지원
- 'AX 원스톱 바우처'(AI 바우처 + 클라우드 바우처 + AI 창작 도구·서비스 구매 바우처) 도입

■ 아태 지역(APAC) No.1 AI Hub를 구축

- 'K-AI Team Korea'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형태(SPC)로 세계 각국의 최고 인재를 영입하여 프랑스의 미스트랄 AI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
- AI 특화 시범도시 'AI Home&City'* 건설 및 '권역별 특화산업 AI 인프라' 투자 추진
* 국민과 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우리나라 AI 기술과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시범 도시'
-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AI 협력 체계 구축

-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으로 AI 3강 기반 조성, 협력국 간 공동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

■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 국가 AI 연구소 육성 및 우수 AI 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체계 마련

AI 시대,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 ‘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28년 시범서비스)
 - AI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 마련
 - AI 네트워크(6G) 실현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기술 개발 적극 추진
-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 저전력·고성능 NPU, 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 조기 확립
- Open-RAN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GPU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 등 요소 기술 육성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 * 산업지원용 AI(주요 거점 데이터센터)-AI 서비스 제공기업(소규모 GPU/ NPU 데이터센터)
 - 개인화된 AI 서비스(EdgeAI)
-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지원 총력 체계 마련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 행정절차 간소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육성
 - 특화 산업형 AI 집적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의 사업화, 인공지능 응용기술 고도화 지원
 - 데이터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통해 어디서나 데이터를 융합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손쉽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제2차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학습 데이터 개발 및 확보 지원
 -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및 공개 플랫폼 구축
 - 방송사 데이터 구매·가공 후 인공지능 Hub에 공개 등 멀티모달AI 개발 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정부의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
-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제, 표준계약서, 학습데이터 익명제 도입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 추진
-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SW분야 전공자의 기업 인턴십 확대를 통한 기업-대학 간 교류 활성화
 - SW 대학 연구소 및 대학 벤처·스타트업과 해외 우수 기업·연구공간 교류협력 지원
- 규제 혁신을 통한 SW산업 성장 지원
 - SW 수요 예보, 일방적 과업 변경금지, 합리적인 SW 사업 대가 산정 등 공공SW 발주제도 혁신 추진
 - 공공SW 개발단가 및 유지보수로 현실화, 국내·외 기업 역차별 개선
- IT·SW 新기술 융합 가속화
 - 지역 및 중소 IT·SW융합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투·융자 확대
 - 공개SW(OSS, Open Source Software) 기반 IT·SW융합기술 혁신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IT·SW 수출 활성화
 - 신흥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한 거브테크(GovTech) 해외수출 강화
 - 선진국과의 AI 기술 협력 강화로 IT·SW 수출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AI 3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 유도 등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 신설

*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임명

-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 혁신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 AI, SW, 사이버보안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

- AI 대학원·전문대학원·연구기관 확대 및 AI융복합 학위과정 증설

- AI, SW분야 교육자금 대출 제도(한국식 휴먼 캐피탈) 도입

■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 체계 구축

- 군(軍) AI·SW 분야 전문 복무 확대

- 교육 인증서 발급 및 공공기관·기업에서 채용·승진 시 가점 부여

-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AI·SW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 양성

- 비전공자를 위한 AI+X(자신의 전공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시

■ AI·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산업 현장의 숙련된 AI 직무 수행자 활용을 통한 AI·SW 교육 전문강사 보강 및 재직자의 교육 활동 허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AI·SW 분야 경력자와 퇴직자에 대해 최신 기술 재교육 과정 이수 후 전문강사로 활용

■ AI 해외인재 유치 및 R&D 지원 확대

-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제도 마련

- 출연기관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 제도 활성화

*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로 창업할 경우, 기술사용료 면제 등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혁신
 - 한국형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 강화로 융합적 사고력 함양
 - AI·SW 수업 시수 확대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예: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수리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등)
 - 대학·기업 협력을 통한 학교 AI 교육 지원 및 교사 재교육 확대
 - AI 분야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AI + X’ 대학교육 혁신
 - 기초학문과 AI를 융합한 ‘AI + X’ 교육모델 추진
 - 프로젝트 기반 온라인 AI 학과 확대 및 기업 협력형 AI 학위과정 개설
 - 지역거점 AI 단과대학·전공 신설, 타 전공 대학원의 AI 전환 유도로 석·박사 인력 양성 확대
 - 성인 대상 AI·IT 재교육 확대를 위한 비학위 과정 운영 확대
-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 AI를 비롯한 과학·디지털 기술·공학 등 글로벌 인재 적극 유치
 - AI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 개선
- AI 기반 혁신 창업 활성화
 - 대학·기업의 AI 혁신 및 창업 프로젝트 추진, 학생의 창업 장려

국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국민, ‘AI Testbed Korea’ 건설
 -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역량을 높여, 삶의 질 제고 및 AI 신상품 테스트베드 구축
-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 국가대표 LLM을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 유도
 -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접근권 보장
 - 인공지능 소외계층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확대
 -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 이용 공간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품질 향상
- 전 국민 AI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역량 강화
 - 지역별 생활 SOC를 활용한 ‘AI 기본역량 센터’ 설치 및 AI·SW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 도입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집중 육성
-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지속투자과 혁신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

■ 필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수급불안 필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강화

-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공동연구 확대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국제협력 확대·강화
- 국격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보건분야 ODA협력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확충으로 건강정보 자기결정권과 신뢰성 강화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활용 보장
 -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로 상호연계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기술개발에서 현장활용까지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 마련
-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 의과학자(MD-Ph.D)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 구축
 -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원)-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 수립
-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 제고와 적정보상 체계 마련
 -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 지원
 - 의료기기 질 관리체계 정비와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
- 간담제도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확립
 - 간담업체 불공정행위 금지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
- 세계 속의 한류 추진 동력 확보
 -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K컬처의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 해외 한글교육 확대 외 K인문교육 실시(세종학당 88국256개소→400개소)
- 한류 확대 기반 마련
 - K컬처의 지구공동체 기여를 위한 “Live Aid K-POP 콘서트(가칭)” 추진
*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진행, 수익금 전액 세계 구호·자선단체 기부
 - 해외 콘텐츠 지원 센터 확대 및 전통 K-Food 지원기관 입주
 - 관광시장 연계 한류 페스티벌, K콘텐츠마켓 확대
- 문화강국에 부합한 문화 외교 강화
 - 개발도상국의 문화개발·문화예술교육·문화유산 조사·보존 지원 확대
 - 세계유네스코 등재 유산 추진 확대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 외교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 콘텐츠 R&D 지원 강화

- 프로젝트 단위 및 이를 위한 사업자간 투자·출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
- 콘텐츠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 * AI콘텐츠, 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으로 확대
- 기획 등 비기술적 R&D, 창작시설, 참여요인(외부인력 협업), R&D 인정 규제적 요소 배제 등 지원 요건 확대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혁신 성장 발판 마련

-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를 제작 및 기획·개발·국내외 유통으로 확대 및 요건 간소화
-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 확대
- 정부·지자체 매칭의 지역 고유 특화 콘텐츠 지원
- 문화콘텐츠분야 정부 기술보증 클라우드펀딩 발행 및 기초투자 국비 지원

■ 콘텐츠분야 세제 지원 확대

-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 신설
- 출판업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
- 25년말 일몰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
- 문화산업기본법 상 분야·플랫폼의 제작·투자·출자로 단계적 확대 검토
- 대·중·소기업 간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문화콘텐츠사 출자·투자

- 콘텐츠 재투자 목적인 경우 환급형 인센티브 지원 추진
- 국내 콘텐츠·플랫폼의 해외 진출, 공동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새로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구 개편
- 저작권 공정환경 구축 및 등록제도 실효성 개선
 - 신기술 등 새로운 창작환경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 불법 유통의 신속 차단, 법적 책임성 및 해외 수사 공조 강화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

- 단회성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콘텐츠 직접출자·투자, 펀드를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 추진

■ 한류 문화의 국내 인프라 확대

-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 국내외 K-POP 꿈나무를 위한 중·소형 공연장 조성
- ‘국립영화박물관’, ‘대중문화예술의 전당’, ‘국립무용원’ 등 문화 위상에 부합한 공간 마련

■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더빙 비용·다국어 번역 등 지원
-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 K콘텐츠 플랫폼 글로벌화 기술 자립 지원
- 첨단기술 산업주도형 인력양성 지원

■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 자급형 콘텐츠 전문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 추진

- 게임: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 미디어: 버추얼 스튜디오 등 공공 인프라 조성, 생태계 지원 확대
- 영화: 안정적 영화기금 확보, 예술독립영화 지원 확대, 관객 확보 지원
- 웹툰: 웹툰 지원 법제화, 해외플랫폼 구축·현지화 지원, 2차 부가사업 지원
-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개선
- 출판·번역: K-BOOK(번역 웹북) 해외진출·디지털 전환 확대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으로 만들겠습니다

■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 * 미국 해군함정 및 해안경비정 신규건조 및 MRO 수주 추진

■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 국방과학연구소 內 국방인공지능센터 역량 강화
- 국방 AI 기반 구축을 통한 지능형 무기체계 전력화
- 차세대전투기·첨단 항공엔진 독자 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 방산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 감면 및 방산 지원 정책 펀드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확대

■ 방위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토록 방위사업청의 역량 강화

- 소요 및 시험평가 등 복잡한 방위사업추진 체계 간소화
-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 업체간 과도한 국내경쟁을 지양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도입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업무 벤치마킹
- 방산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추진전략을 제안받는 ‘Innovation Mining’ 제도 도입
- 수출품목 개발 등 해외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매 방식 다변화
-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방위사업청 내 전력지원체계 재편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첨단산업 혁신 K-이니셔티브로 경제안보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대도약) 프로젝트' 추진
 - * 첨단반도체·나노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양자컴퓨터, 첨단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그린수소, 우주항공산업 등
- 빅테크 강국을 위한 A(AI 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우주항공), E(에너지), F(제조업) 글로벌 기업 육성
- 첨단산업 혁신기반(인력·자금·규제) 지속 개선
- 현장 맞춤형 첨단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 파트너십(상호협력·정보공유) 촉진

■ 주력산업의 첨단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융합화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 우위 강화
-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첨단산업·주력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으로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
- 중장기 산업별 'K-주력산업 발전비전 및 전략' 수립
 - *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 환경 및 잠재력 제고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강화로 미래먹거리 창출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강화
- 3대 차세대반도체(전력, 차량용, 저전력 AI반도체) 기술 개발
- 차세대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초격차 첨단기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중소·중견기업) 육성
- 첨단기술 보유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치로 국내 공급망 강화
- 첨단산업을 위한 사내대학원,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제도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역혁신 역량의 전초기지로 육성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24년 기준, 12곳 지정)를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으로 적극 육성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대·중소기업 상생에 기반한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선도형 산업생태계 구축

■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첨단산업기술 역량 강화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공급망 위기 선제대응으로 특정 국가의 높은 의존도 축소
-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소부장 공급망 강화와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24년 기준, 10곳 지정)의 지속적인 맞춤형·패키지 지원으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 첨단산업 소부장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발굴·육성

■ 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 추진

- 빅데이터·AI(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생산성 향상
* 클라우드, 자율주행, 3D프린팅, IoT 및 커넥티드 디바이스 등
- 중소·중견기업의 DX·AI 도입과 가속화를 위한 지원 확대
- DX·AI를 신산업·비즈니스 전반에 통합·적용하여 미래 기업경쟁력 강화
- 산업의 DX·AI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성장 잠재력 제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 규제샌드박스 통해 확인된 실증 성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신기술·신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산업 체질 개선 지원 강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경제안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균형발전 기여 강화

-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
- 지역혁신거점인 특화단지,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지역 산학연 등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극대화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경쟁력 제고

-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마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폐수 등) 지원 강화

■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 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확충
- 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 강화 및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소재·원료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

- 이차전지·반도체의 핵심 소재·원료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다자·양자 국제협력 확대로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 지원

■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을 통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여력 확보

2. 성장 기반 구축

- 1 안정적 R&D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R&D)의 지속성을 담보하겠습니다
- 2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3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 4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5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6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7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 8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9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10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11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12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13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14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 15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사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16 북극항로 진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 17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18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 19 노후 생산기반을 리모델링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20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21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 22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23 사회적 경제 지원으로 풀뿌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 24 ESG 기업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5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 27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 28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성장 기반 구축 01

안정적 R&D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R&D)의 지속성을 담보하겠습니다

- R&D예산,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 확보
- R&D 사업 심의 범위 확대와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으로 정부R&D예산 심의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정부 R&D성과가 쏠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 풀뿌리 기본연구 복원과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으로 R&D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 확보
 - 여러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지원체계 일원화
 -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현장·지역·청년·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 추진
- 젊은 신진연구자(신임 전임·비전임 교원 및 비정규직)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지원 강화
-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대로 청년연구자의 연구 안정성 확보
- R&D성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혁신박스 도입 검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구조개편 등 혁신방안 마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선임직 이사에 산업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포함토록 하는 등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추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정책, 전략수립 및 연구분야 조정기능 강화
 -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제로(Zero) 추진
 - 연구자의 연구행정 업무 부담 대폭 완화 및 불합리한 관련 제도 개선
-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 등 미활용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와 경력전환을 통한 인재 활용성 극대화
 - 여성과학기술인 Staff Scientists 제도 등 추가 도입
 - * Staff Scientists: 연구책임자 밑에 연구장비 운영, 실험실 안전관리, 연구비 관리 등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정규직
-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평균인원수에 해당하는 대체인력 채용 추진
- 은퇴 고경력 연구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확대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예산 및 성과평가에서 대폭강화
-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
- 정부 R&D 역량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분산R&D체제를 집중체제로 전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폐지하고 R&D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 R&D 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와 신속성 강화
-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
 - 과제 기획을 포함한 R&D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D 대폭 확대
 - 단순한 기술개발 중심의 R&D 사업이 아니라 R&D, 인력양성, 실증, 사업화, 국제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범부처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중앙주도의 연구개발이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되도록 지방 혁신역량 강화 추진
 - 지역전략산업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지방거점대학을 연구단 중심 지원 방식으로 지원·육성하여 우수한 지역R&D인재 양성
 - 메가시티, 혁신도시, 지역 연구기관 클러스터 및 특성화 산업단지와 연계한 R&D 인프라 확충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블록 펀딩(Block Funding)연구비 지원
- 지방 과학기술협동조합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조합 현황 및 정책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연구산업 기업 지원으로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위성정보 활용을 포함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
- 대학+평생교육+헬스케어가 결합된 연구자 시니어 타운 개념인 한국형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UBRC,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과학기술 R&D와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도입
- 미래혁신인재를 키우는 어린이수학관, 어린이과학관 및 과학ICT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기반 과학문화 인프라 지속 확충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과 중소기업 AI 스케일업 펀드 조성
-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방안 모색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물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 기회 제공 공모펀드
 -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및 투자자에게 다변화된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기회를 제공
-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자 유인 → 벤처투자 자원 확대 → 창업·벤처기업 투자금액 증가
 - 전략산업 성장 지원 및 고용증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로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 규모 대폭 확대
 -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에서 인센티브 매칭 대폭 확대
- 지역 특색 및 산업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 지역 특색과 여건에 적합한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공간인 스타트업파크 조성
 - 팁스(Tips) 프로그램을 지방 스타트업 중심으로 2배 이상 확대
 -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별 창업인프라 대폭 강화
- 대학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역 R&D 거점으로 집중 육성
 - 대학 연구장비 활용 산학 공동 R&D 지원 및 인턴십·계약학과 등 입주기업 전용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 지역의 특성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 지역 주민들이 스타트업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 역할
- 비수도권 지역의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 단위의 혁신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편중을 해소
 - 지역의 전문가를 전문개인투자자로 육성하여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 대폭 확대
- 여성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 소셜벤처 예산 반영 및 지원 추진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해 벤처지분투자 형식으로 인큐베이팅
 - 인큐베이팅, 멘토링/전문가 지원 성장 가이드 등을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시장분석을 통해 성공적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R&D 지원체계 개편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위해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규제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 마련
 - 규제 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실효성 강화
 -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구축 마련
- AI를 활용한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스템 개선

성장 기반 구축 09

■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신기술 규제 간소화 체계 구축 추진 : 신속·통합 검토 시스템 구축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

- 정부·국회가 기존 산업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 산업계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
- 국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정책 이해도와 투명성 제고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 및 협력 사업 지원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공동 프로그램 등 제도 마련

성장 기반 구축 10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크리에이터 미디어 창작 역량 및 지원 강화

- 청년 미디어 창업자 및 크리에이터 양성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청년을 위한 미디어 창업 허브 조성(Startup Station)

- 청년들이 자유롭게 협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 및 창작공간 지원
- 창업 컨설팅, 마케팅, 법률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한류의 강점을 살린 청년 글로벌 시장 진출 도약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번역, 더빙 등 재제작 지원 포함)
-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교류 및 국제 행사 참가 지원

■ 필요 최소규제 방안 마련 통해, 크리에이터 보호 및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 불공정 계약,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지원
- 창작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산업 표준계약서' 마련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창업단계) 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연기금투자펀드(금융성·사업성기금 중심) 내 현금성 자산 등을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
 - 민간 매칭형태의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운영하여 마중물 기능 강화
- (성장단계)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강화
 - 신용·담보가 부족해도 장기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확대
 - 지식재산(IP) 기반 보증 및 유동화보증(P-CBO) 등 연계 지원
- (상장단계)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 첨단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가치평가·상장심사방안 마련
 - 상장 전부터 투자하여 상장 이후까지 장기투자하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
- (지역투자)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
 - 정부·금융회사·지자체·지역사회 등이 공동으로 재원 출자
 -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 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중소 금융회사들을 위한 공급망금융 플랫폼 구축 노력
 - 초대형투자은행(IB)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 구축
 -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확대
 -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진출 위한 통상·외교적 지원 강화
 - 스마트TV 제조사와 미디어 사업자 간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TV)를 통한 해외진출 협력 강화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강화
 -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 K-OTT 콘텐츠의 IP(지적재산권) 확보 및 국내·외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 방지

■ 홈쇼핑 등 미디어 커머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화 데이터홈쇼핑 채널신설 및 기존 홈쇼핑 경쟁력 강화 추진
-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특화된 데이터홈쇼핑 채널 도입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완화 동시 추진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 중소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 확대 및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리스크 경감
-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 강화
- 방송법상 금지행위 중 불공정 거래행위 보호 대상에 제작사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전국 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원 등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및 역할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
- * 간결한 신청·정산 및 투명한 집행 점검
- 문화예술사업 소액 지원사업의 자부담 의무 폐지 추진

■ 문화정책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보공개 의무화, 민간전문가 참여 확보
- 예술기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공모제 강화

■ 문화국가 발판을 위한 정책 추진 기구 설치·확대

- 현장 문화정책의 반영을 위한 문체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설치
- 「국가도서관위원회」 및 「장애인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위상 강화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 현재 5년 50~100%로 되어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
 -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하는 것을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확대(감면기간·한도 등)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국토교통 첨단사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위한 규제 재설계 및 정부 지원 확대
 -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 자율주행·스마트도시·4D 지도 등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 재검토로 실증화 토대 마련
 - K-UAM 상용화 추진 로드맵 현실화 및 공항셔틀·관광·공공을 중심으로 한 실증화 사업 국가지원 확대
-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물류혁명 구현
 -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전기·수소 선박·열차 등) 실증화 지원 및 수소연료 보조금 등 지원 방안 추진
-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의 부품산업, 정비산업, 공항서비스업 등 육성
 - K-공항사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항공 위상 제고

북극항로 진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 북극항로 개발 거점 육성 지원
 - 미래 가능성 주목 및 지속적인 경험 축적 등 진출 기반 강화
 -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컨트롤 타워 및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강화
 - 우리 기업의 북극항로 진출 지원 및 시장 환경 분석 등 미래의 북극항로 활성화
- 북극항로 안전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항만 인프라 개발 추진
 - 극지 운항을 위한 선박 건조 기술 개발 및 항만 인프라 개발 추진
-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체제 확립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
- “부울경 및 동남해안” 북극항로 거점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항만재개발 및 관련 연구기관 등 조성 추진
 -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민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 조선해양산업 및 선박 관리 등 항만연관산업(MRO) 특화 지원
 - 컨테이너 내빙선 건조 기술 고도화 정부 지원 및 극지선박 MRO 전문 기술, 친환경 정비 운영기술 고도화 지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IMO(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국적선사 선박금융 확대
 -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개조 지원금 대폭 확대
 -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상향 확충 추진
 - 정책금융기관 통합, 친환경선박 전환 특별선박금융 지원 체제구축
 - 친환경연료 선박 건조시 특별 보조금 도입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내항해운 업계 확대 추진
 - 연안해운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선·화주 상생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대상 확대)
- 친환경 연료 공급선박 설계·실증, 산업수요 연계 등을 통한 친환경 연료 (전기,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망 확대
- 국내-해외 및 국내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신설 및 확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스마트 제조혁신 국가 도약을 위한 지능형·자율형 공장 대폭 육성
 -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원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확산 추진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확대한 맞춤형 AI 제조혁신 추진
- 탄소중립 팩토리, 안전한 휴먼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3.0 추진
 - 기존 스마트공장을 선진형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
 - 마이제조데이터 중심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부리산업 지원 강화
 - 부리산업 예산 확대 및 에너지비용 지원 추진
 - 공정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화 지원, 현장인력 부족 애로 해소
-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노후 생산기반을 리모델링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디지털·탈탄소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 산단화 사업 확대
-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로 청년 친화적 문화융합산업단지 조성
-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 청년 거주환경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문화레저 인프라 조성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주환경 개선
- 거점 도시 내 휴·폐업공장 부지 및 도심지역 유휴부지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활용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
- K-팝, K-푸드, K-뷰티,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K-컨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경쟁력 확보 주력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 대상 기업 선정, 자금·인력·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실태조사 등
- 중소기업 ESG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소분야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준비→진단→이행」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 자금·R&D·공정개선 등 지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 탄소중립 추진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반구축, 에너지전환·친환경 설비 교체
 - 탄소감축 지원사업, 업종별 공동 R&D, 세제혜택 등 도입
-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비중 확대
-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중소·벤처 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 확대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등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등 사회적합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 스마트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및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해외건설 인프라펀드 획기적 확대 등
 -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원으로 풀뿌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
 -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경제 육성
-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구성원 삶의 질 향상
 - 효과적 지원 체계 수립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담 완화
-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SG 기업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펀드 등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후기술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
 -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책임 있는 투자 유도
 - 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결과 공시
-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 한국적 상황·산업별 특징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 무늬만 녹색인 ESG위상에 대한 규율 강화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 기업의 기후공시를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 도입
 - 기후위기 대응계획,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강화
 - 공공기관 맞춤형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ESG 평가 체계 도입
 - ESG 평가에 공공기관 공통으로 적용될 사안에 대한 최소 통과 기준 도입
 - * ESG는 Environment(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 개선)을 약칭한 것으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공익성·공공성을 높이는 ESG를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여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정책금융기관의 ESG 경영 우수 기업 투자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대출, 보증 시 대상 기업의 ESG 성과 반영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확대
-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가칭) 제정
 - 기업이 ESG 평가 체계 구축 및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컨설팅 지원
 -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우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을 높ی겠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내용 국회 보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장기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 반영
- 재정의 경기변동 안정 기능 강화
 -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경제성장률 및 목표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정의 경제성장 및 안정화 기능을 강화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의 구속력 제고
 - 세입 등 중기재정전망 상 재정운용 계획과 실적 간 과도한 차이 발생 시 원인 소명과 함께 정부의 개선 방안 제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 무분별한 조세지출 방지 체계 확립

-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엄격화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국회에 결과보고 의무화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재정사업의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 국회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행정 효율, 복지 확충, 경제성장·안정에 부합하는 재정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부 부처 및 사업별 성과관리에 앞서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조세지출 성과관리 결과의 구속력 강화

■ 성과부실사업, 중복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낭비적 집행 방지

-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와 함께 동일목적사업·유사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 예산 및 결산에 성과평가 반영

-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 성과 저조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3. 공정경제

- ❶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납품대금을 제값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❷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❸ 기술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❹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❺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❻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❼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❽ 방송·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❾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❿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⓫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⓬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주식시장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 ⓭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 ⓮ 청년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⓯ 국민이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공정경제 01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납품대금을 제값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우려 불식 및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 부여
 - 대·중소기업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해소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확보
-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협업거래, R&D 등 지자체 및 지방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하여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로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 제공
 - 마일리지 혜택 강화 및 결제수단 확대, 대기업 제품 등 다양한 구매 혜택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우수 청년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추진
 -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다양한 공제상품 추진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포용·성장·혁신금융 등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연체율 감소 등 은행권과의 상생체제 구축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교통비 지급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재추진

기술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과 정책 집행 및 사회분위기 조성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를 입증
-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활용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효성 강화
 -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 기술보호 전문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으로,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 재창출
 -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처리 제도 도입
 -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조치, 정부 보고, 장애 원인 고지 등 의무화
 - 국가적 참사,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명예 보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재 수준 강화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
-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 방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 부여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방통위·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배달문화 조성
 - 배달 종사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
-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 마련
 - 친환경 포장재 개발 추진, 분리수거제도 개선 등 생활폐기물 대책 집행 강화
 - 친환경 포장재 또는 다회용기 사용제도 도입 추진

방송·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미디어 규제의 형평성 및 규제체계의 선진화

- 방송미디어의 사후 규제체계 및 Negative 규제 중심으로 전환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의 동일·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 개선
-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진흥 및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방송 광고제도 혁신

- 방송광고의 프로그램 총량제에서 ‘일일 총량제’로 전환 또는 양자 병행으로 개선
- 방송광고의 협찬제도 투명화 및 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 방안 마련
- 미디어랩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 허용
- 정부광고의 독점 대행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한 ‘미디어·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개편

■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투명한 대가 산정시스템 마련
- 대가 협상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갈등 발생 시 정부의 공정한 조정기능 강화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과 불합리한 특약사항 및 권리합의서 작성 금지 법제화
- 프로그램 창작 및 제작기여도에 따른 제작사의 수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감독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 대폭 강화
 -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당국을 평가
 - 소액분쟁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검토
-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 기업회계·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한 오픈파이낸스(개방형 금융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인프라 혁신, 효과적 금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 우회인수·차명 등 목적으로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관련 피해자 손실보상에 활용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 강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강화
 -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주식시장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유지요건 적용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 장기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
 -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 전환
 -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환매청구권 등 실효성 제고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
 - 2025년 연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 연장
 - 코스닥 공모주 및 공모 주식관련사채 우선배정물량 상향조정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해 혁신로드맵 수립
 -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 규제 간소화 등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및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검토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
-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청년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설정기한(1년 이상 3년 이내) 동안 일정한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시점에 정부가 일정비율(예시 25%)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
 -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
- 모든 청년이 누구나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
 - 기초재무진단 및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서민금융통합센터 및 은행권 지점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접근성 제고

국민이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 ‘이·전용, 일반수용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로 전환
- 부처별 장·차관 등이 정기적으로 국정과제와 중점 예산사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가칭)국민과 함께, 재정사업 알림 프로그램’ 시행
-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별 설명자료 내용이 검색되도록 개선

4. 국가균형발전

- ❶ 5국,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습니다
- ❷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❹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❺ 지방성장거점 완성으로 균형발전 완성하겠습니다
- ❻ 청년·지역 중심의 고용(일자리) 정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❼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❽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❾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❿ 민주당이 시작한 철도지하화, 민주당이 실현하겠습니다
- ⓫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⓬ 지역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⓭ 국민의 휴가와 관광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⓮ 관광산업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⓯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⓰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⓱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자치분권형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⓲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❶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❷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❸ 어업의 미래를 위하여 청년 어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❹ 섬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❺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❻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겠습니다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습니다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체계 개편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제시
- 광역시·도간 통합,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추진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역주도 통합 안 마련 및 중앙정부 인센티브(특례) 제공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 기존 특례시는 인구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거점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지방 특례시를 선정하여 권역성장을 견인
-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 발굴 및 재정지원 강화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추진 사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제도화하며, 과감한 재정지원안 마련
- 읍면동 체제개편 및 유연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에 맞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
- 지방소멸기금 일몰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일몰예정 2031년)
- 지방소멸기금 평가체계 개선 및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
 -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중앙정부(범부처) 컨설팅 추진
 - 신규사업 중심에서 기금투입효과 증대 사업 등으로 기금운용기준 체계 개편
 - 단 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 사업 비중 확대 등 효율성 증대방안 마련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등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연계한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등에 첨단투자지구와 산업융합지구를 지정하여 국내외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 추진
 - 지역주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혁신클러스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지역 특화·연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
-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재도약 기회 마련
 - 허브기업 중심의 기업군 이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산업 위기대응 전주기 시스템 가동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지원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적기 지정으로 지역경제 위기 확산 조기 진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 등을 경제 상황에 맞게 재정비

■ 지역거점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노후산단 환경개선과 구조고도화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
- 스마트 그린산단의 추가 지정('24년 기준, 21곳 지정)으로 디지털·인공지능전환(DX/AX)·탄소중립 전환(GX)의 성공모델 창출
- 입주기업의 제조공정의 디지털화·AI전환 가속화, 에너지 효율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 스마트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추진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 휴폐업공장리모델링을 통한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 확충
- 산단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및 교통비 지원 등으로 접근성 개선
-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청년친화형 문화융합 선도산단 추가 지정

■ 지역투자자와 고용을 이끄는 지역대표 중견기업 발굴 육성

- 중견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중소→중견→글로벌전문기업)을 위해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강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육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및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모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으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에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에 마중물 역할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24년 기준, 8곳 지정) 사업 내실화로 성공모델 창출 및 지역 활력 제고
- 유턴기업 지원 확대로 투자애로 해소 및 정착지원 강화

지방성장거점 완성으로 균형발전 완성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 수립
- 이전 도시내 연구개발(R&D)캠퍼스 유치 및 규제특구 확대 지원
-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교육·문화·인프라 지원 패키지 병행
-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 위한 규제 완화

- 법인세 감면 확대·직원 주택우선공급 등 통해 기업본사 이전 유도
-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 지역별 도시경쟁력 확보 위해 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 방안 도입

- 도시 내 특색 살린 거점별 랜드마크 활성화 위한 ‘도시 규제특례 적용’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

- 1기신도시 신속한 재개발
- 재건축·교통이 편리한 2기신도시 건설
- 자족기능을 갖춘 3기신도시 건설

■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강화

-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확대, 신규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지정방식 도입
-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소득세 감면확대 검토 등 유인책 마련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100원 행복택시 등 포함) 국비 지원

청년·지역 중심의 고용(일자리) 정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

- 청년중심의 청년내일채움 공제 시즌2 청년미래적금 도입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지역고용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공표 등 지역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집행
- 지역 일자리 효과적 창출·유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 중앙·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노·사·정 사회적대화 제도화

■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

- 공공고용서비스 통합 운영 : 고용센터 및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재편하여 지역중심의 일자리발굴·일자리매칭·생애경력지원·채용기업지원 및 전문적 구직자 취업지원 추진
-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취업강화
- 산업변화 대응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산업별·직무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
-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 진입 목표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프로그램 및 해외 유학 지원 확대
- 신입생 대상 거주형 캠퍼스(Residential Campus) 도입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등 공동체 활동이 융합된 통합적 교육환경 제공

■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취업 연계형 소단위 전공(나노·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의무화
- 학과·전공별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도입,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확대

■ 세계적 연구대학 도약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유치에 위한 제도 마련
- 대학 내 국가연구소 설치, 국책·민간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 대학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 개선, 연구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거점국립대 간 비교 평가지표 공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지역혁신·성장의 중심, 국립대-사립대 간 자원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의 RISE 체계 구축
 - 정부는 국립대를 지역혁신의 허브로 구축, 지자체는 RISE 체계에 기반해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원·협력 체계 구축
 - 초광역권 단위 RISE센터 설치로 대학-지자체 연계를 지역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재편
 - 서울대·인천대(법인국립대) 외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분배 강화, 지역혁신형 사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 및 구조개선 유도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정지원 책임 강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협력 체계 활성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학교 체제 구축
 - 소멸 위험 지역에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을 확대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 체제 재구조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
 -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시범사업 추진
 - 교육특구 내 학교는 365일 열린 학교, 사교육 부담 제로 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학교 모델로 운영
- 농산어촌형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 체제 구축
 -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마을교육 체제로 전환해 지역과 학교의 상생 기반 마련
 - 학교, 관공서, 보건소, 마을회관,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 조성
 -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산어촌 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교육 다양성 확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 지방의회 사무·인사·권한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 필수사항 마련

민주당이 시작한 철도지하화,
민주당이 실현하겠습니다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 철도지하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사업 대상지 확대
 - 수도권·비수도권 선도사업지 추가 지정으로 균형발전 토대 마련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단순자문기구가 아닌 마을행사 개최, 주민참여예산 검토, 위탁사무 수행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

지역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설립 지원(문화형 생활스포츠클럽)
 -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모임·전시·발표 등 공간지원 및 동아리간 교류, 생활문화축제 개최
-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협동체의 생활문화 공간 지원
 - 지역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마련(한국판 아난탈로)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
 - 주민 중심의 복합문화센터 조성(미술관형, 영화관형, 도서관형 등)
- 지역의 독서 생활문화 환경 조성
 - 지역서점의 북카페 리모델링·독서모임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
 - 공공·민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확대 및 사서 인력 확충 지원
- 지역 문화시설의 보존과 발전
 - 등록 문화유산 보존(긴급보수) 지원 확대
 - 종교 및 지역 전통문화 시설·프로그램 운영의 국비 지원분 확대
-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문화권·지역언어 육성
 -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등 지역문화 확산 기여
-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의 휴가와 관광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 신청자의 방문지역 사전예약 → 지역사랑 휴가지원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 취약계층은 정부·지자체 매칭만으로 여행 지원 확대
- ‘1박2일’ 기한의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신설
- 국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 교과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어르신 : 지자체, 민간 매칭 연계 ‘실버여행’ 지원
 - 가족 : 공정여행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인증제 실시·확대

관광산업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국내·국외 투자 유인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문화관광산업 특구’ 지정
- 워케이션(Workcation) 관광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지원(정부↔지자체↔주민기업) 협업 모델 개발
 - 지역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지원(인프라, 정보구축, 플랫폼 지원)
- 콘서트·공연·음식 문화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해양·섬, 농어촌, 숲·산림 등 지역자원 활용 특화관광 활성화
 - 노후 및 유휴 관광시설 재생
- 관광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확대
 - 신청 유인 요인 확대 및 영세 업체 등록지원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 지원의무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발행규모 및 보조율 결정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
 - 2,000만원 한도*에서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해당 기부금은 오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활용
 - * 현재 개인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
 - 법인기부 사업의 지출현황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 기부방식 개선 및 사용처 다양화 등 활성화 추진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자치분권형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관리, 지역사회유지 등 농어촌주민의 공익기여행위에 대한 주민수당 단계적 지급

-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농어촌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 지급
-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규모와 비중 확대

-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 국가균형발전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제고

■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 (농정분권종합계획) 국가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 (계획협약) 중앙정부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은 자치단체가 발굴하는 중기계획 체제를 구축,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도입. 지자체 자율편성농정 사업 확대
- (농어업회의소) 자치농정에 농어민과 주민 참여 보장, 지역농정거버넌스 제도화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노지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및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펀드 확대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확대, 스마트농업용 기자재 공유센터 조성
- 지역공동체 주도 스마트농업경영체 육성, 중소농가를 위한 적정 모델 개발, 데이터·AI기반 솔루션 보급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농산업 육성

-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푸드테크 산업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

■ K-푸드 혁신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K-푸드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푸드테크 소부장 첨단기업 육성, 식품융합클러스터 혁신허브 구축 등

■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 등 신성장동력 창출
- 딸기, 한우, 종자 등 전략품목 세계화 및 수출 확대
- 전통주·전통발효가공식품 활성화 및 로컬명품브랜드 육성
- 생산자조직의 농식품 산업화 지원, 자조금 지원 확대
- 농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확대로 농가소득 및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

- 스마트팜, 농기계(자율주행, AI),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육성 및 수출 확대
- 농업과학기술(R&D) 혁신 및 강화
 - 현장기반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정책 및 민관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강화

농촌재생프로젝트로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의료, 돌봄, 생활,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구현
 -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확대,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확대
 -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 육성, 돌봄인력 지원 등)
 - 공공형 버스 및 수요 맞춤형 택시 확대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밸 실현
 - 농촌빈집정비법 제정
 -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 지원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 확대,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 해결
 - 외국인 계절노동자 처우개선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인권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 교통비, 보험료, 숙박비 지원 확대, 숙소 건립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도시 또는 읍면 거주 내국인의 인력 중개 강화
-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 및 연수제 도입, 창업농·겸업농·고용농 맞춤형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예비농업인 제도 포함
 - 연수제도 도입: 연수시 취농준비자금 지급, 연수후 법인과 농가에 취업 지원
 - 농축협·농업법인 등과 연계하여 품목별·축종별 전문교육과정 지원
- 공동영농 조직 육성 및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지원
 -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의 취업지원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지위 인정, 여성 참여 비율 확대
 - 농업인 출산·육아 도우미 지원 강화,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 다문화 가정 여성 농업인 교육 및 취업 지원
 -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지원 강화, 소규모 농민가공 지원
-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경영지원, 지역리더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어업의 미래를 위하여 청년 어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어업인 정착자금 지원 확대

- 40세 미만의 청년어업 창업(예정)자에게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청년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등 창업과 어촌유입 유도
- 어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

■ 청년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사업 개선

- 물가 상승 반영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청년어업인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확대 추진

■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로 청년귀어귀촌 지원

- 어선임대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
- 연안어선 매입(정부 매입) 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해줌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연안 감척 어선을 활용한 임대어선 공급 확대(업종 허가 규제 완화)

■ 청년 어선임대 자기부담금 임차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하향 조정 추진

- 현재 임차료 50%(최대 250만원/월) 자기부담금을 30%(최대 150만원/월)까지 하향 조정하여 어선 임차비 부담 완화

■ '30년까지 청년어업인 확대 양성

- 어업희망 청년에게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 매칭, 임차료 지원, 어업 교육·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청년어업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어구구입비, 역량강화(어선어업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지원

- 어구구입비 신규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 생계 유지를 위한 어선어업 교육, 훈련 지원 및 어촌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지원을 통해 조기 적응 지원

섬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섬주민 교통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
 -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여객 운임지원 확대
- 섬 방문 관광객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섬 방문 관광객 여객운임·숙박 할인 지원 추진
- 연안여객 안전을 위한 해상 전기차 화재 사전 방지, ‘연안여객선 소화설비’ 예산 확대
 - 여객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전기차 화재 확산 지연에 필요한 화재 진압장비 및 소화장비 도입 및 설치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중소방송사 위한 지원 확대
 -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중소방송사(종교포함) 지원 확대
-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 지원
 -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 수수료 수익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및 대안 마련
 - 지상파방송 및 종편PP가 자율적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 인센티브 부여
-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
 -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이·통장수당에 대한 국비보조 추진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및 국가지원

5. 기후위기 대응

- 1.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2.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3.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습니다
- 4.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 5.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 6.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탄소농업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7.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8. 국가가 책임지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9. 脫 플라스틱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저장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10.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 11.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12.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 효과 반영
- 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및 가뭄 선제 대응 방안 마련

- 도시 지하방수로와 대심도 빗물터널추가 설치 및 하수도중점관리지역 확대 추진
- 지방하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설치 확대, 국가·지방하천 배수시설 개선 및 제방보강과 홍수 대응강화 4대강 보 개방 추진
- 노후상수도개선사업 추진 확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재추진, 도서관 등 공공시설 스마트 음수대설치 추진
- 가뭄해소를 위한 지하수담 건설, 해수담수화시설 보급 및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산간지역 물부족 해소 샌드담 설치 추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추진

- 2030년까지 기후테크 R&D 예산 대폭 확대
- 탄소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혁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의 기반 창출
 -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전통산업 등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체계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

-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제조업 공정 개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기후테크 신산업 발굴·육성
 -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
 - 석유 기반 선박,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전동화 추진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촉진
 - * 사용 후 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재활용체계 구축, 재제조 산업 확대, 녹색제품 등
-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추진선(조선), 화이트 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강화
 - 산업 R&D 지원체계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친환경 공정(工程), 시설 전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습니다

RE100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지원 강화로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활성화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RE100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 시장참여자와의 소통과 소규모사업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지원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기업의 RE100 역량 강화

-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전남을 해상풍력의 전초기지로 조성하여 전남 RE100 산단 조기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
- 산단입주 중소·중견기업의 ESS 연계 RE100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전환 지원
-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강화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로 지역 RE100 달성과 재생에너지 선순환 모델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 부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
-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지원
-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대규모 에너지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유 강화

- 투명한 정보 공개로 대국민 수용성 제고 및 소통 강화
- 정보 공유로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 전남·서남해·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해상풍력 소부장 공급망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 확보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 주민이익 공유(햇빛·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상생 도모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기획된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 * 서해안·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등으로 신재생e 확대에 따른 송전제약 및 계통 불안정 해소
-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초고압직류송전) 적극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 확대
 - * 호남 등 계통포화지역에 우선 투입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RE100 추진
- 경기도~서해안~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로 RE100기업 유치

■ 전력수요의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주민 인센티브 마련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 섹터 커플링(재생에너지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AI 등 ICT 융합 기반의 수요·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 에너지절약시장 활성화 및 히트펌프 보급 확대
-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강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 그린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 수소클러스터 조성 추진
- 수소융합 슈퍼스테이션 기반 확대, 수소 가스터빈 기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24년 기준, 6곳 지정)를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에너지특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생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에너지 신산업 발굴 육성
- 기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성장동력 확보 지속추진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주민소득 지급, 마을 복지·에너지 사용

-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발전
-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마을 복지·난방 및 에너지 사용
-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 등 공적 기관의 운영 관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

■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가 햇빛연금 지급

-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

■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마을과 영농에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 추진

- 햇빛 발전으로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으로 마을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 수상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믹스로 마이크로그리드 실현
- 마을 전기충전기 설치, 전기 트랙터·콤바인·이양기 등 상용화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 농식품 RE100 단계적 도입,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향상

- RE100 농산물, 스마트팜·축사·시설원예·유통가공시설·식품공장 등 재생에너지 이용촉진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탄소농업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 친환경직불제 확대, 재배면적 비중 두 배로 확대
 -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 제도 개선으로 농가 생산기술 지원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지원법 제정 등 축종별 개별법 전환 및 육성 지원
 - 적정 사육두수 관리 및 경영안정대책 마련, 동물복지·생태축산 활성화
 - 저메탄·저단백·질소저감 사료개발 보급, 사료 절감 등 사육구조 개선
 - 가축 폐사율 감소 사육기간 단축·정밀사양관리를 위한 기술 보급 확대
- 고위험 감염병 지역별·축종별 예방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가책임 방역 강화
 - 과학적인 예방 방역체계 구축 및 살처분 보상 기준 개선
- 지역자원기반 순환농업 활성화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및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 가축분 퇴비 이용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 탄소중립직불제 도입으로 저탄소 농업활동 지원
 -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로 확대 개편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산불진화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진화헬기·고성능진화차량 등 확충, 특수진화대 확대·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일상 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지원제도 개선
- 지속가능한 ‘백년 숲’ 산림 순환 경영과 임업 활성화
 - ‘베고-심고-쓰고-가꾸는’ 산림순환경영, 국산 목재 생산·유통 생태계 구축
 - 공공건축물 국내산 목조 건축 확대, 임산물 산업 활성화(생산·가공·마케팅)
- 임업직불제 확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
 - 임업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개편하여 산주와 임가의 경제여건 개선
 - 은퇴·부재 산주의 산지를 임업인에게 연결해주는 산지은행 도입

- 도시부터 산촌까지 건강한 산림 육성하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산림 서비스
 -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정원도시 확대로 숲세권 확충, 산림 관광·레포츠 활성화
 - 숲교육프로그램 확대, 산림 치유 활성화, 숲 산후조리원, 숲 요양원 등 확대
-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환경 친화적 숲가꾸기 및 선진국 수준으로 임도 개선, 임업 기계 고성능화, 수종전환
 - 목조 건축 확산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목재 펄릿 보급 이용 및 탄소저장 확대

국가가 책임지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확대 운영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국가책임 확대
 - 국가 해안쓰레기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 확대 운영
 -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갯벌 정화사업 확대 추진
 - 갯벌어장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갯벌 생태계 복원
- 수산물물류환경개선 및 오염으로부터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어상자 보급 확대
 - 전국 수산시장 및 위판장 등에서 사용 중인 나무어상자를 수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친환경 재순환 플라스틱 어상자로 전면교체 확대
- 폐어구 수거 유인을 위한 어구보상금 상향 추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지자체) 확대
- 폐어구 재활용 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재활용업무 위탁 수행
 - 폐어구 부착물·염분 제거·재질별 분리 등을 위한 공동집하장 및 광역집하장 설치·운영 확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 모니터링 강화

脫 플라스틱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저장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은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서 탄소중립에 기여
- 자원순환경제 선진화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 마련
 - 2030년 감량 50%, 실질재활용 70%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
 - 순환경제 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 추진
 - 희소금속 회수 기술개발 추진
-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
 - 종량제봉투 최소화 연구성과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 광역소각장 신·증설 지역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원료 사용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제도 강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 한-중간 미세먼지 저감 위한 협약(협정) 체결로 공동저감 추진
- 통합인허가사업장 관리 강화로 2029년까지 $13\mu\text{g}/\text{m}^3$ 수준 달성
 - 통합인허가사업장 사후관리 인력 및 전문성 보강으로 자가측정배출구 미세먼지 수시 관리 추진
 - 4-5종 사업장에 저감시설 지원사업 확대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운영 감지 센서 신속 부착
-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질소산화물(NO_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_3) 관리 강화 대책 추진
 -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및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추진
 - 노후화물차(4등급)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추진
 - 100여종의 VOCs 물질 중 중점관리 물질 선정을 위한 인벤토리구축, 친환경도로개발 R&D 추진, 취약계층 이용 건물 대상 비산스프레이 사용 금지 강화
 -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 저감 위한 농림부-환경부 공동 대책반 운영 추진
-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 친환경 혁신적 교통·수송 분야 전환 정책 추진
 - 중·저가형 보급형 전기차 및 수소상용차 판매 추진
 - 전기차 화재보험료 및 전기차 안전검사비 한시적 지원 추진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대로 회복
-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추진
-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 4대강 유입산단폐수(낙동강), 미량유해화학물질과 축산폐수에 먹는물 처리방식(오존, 활성탄)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대폭 차단 추진
- 밭에서 유출되는 인, 질소 같은 비점(Non-Point)오염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대 추진
 - 하수처리장 배출수 인 농도 지역 구분 없이 0.2mg/L 동일 적용
- 녹조발생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처리제 적용 방법과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마련 추진
-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로 확대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소형 보, 낙차공, 댐 등 수리구조물에 대한 평가 및 철거·개선 추진
- 하굿둑 개방 통한 생태복원 추진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를 위해 제도정비,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조정, 연구지원, 국제협력 추진
 - 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기존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국유림, 해양보호구역 등)의 중복 관리 문제 해결
 - 해양보호구역(MPA)확대를 위해 신규 지정 대폭 확대
 - 국유림 및 국가 습지의 보호지역 편입 확대
-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전파자인 침입외래종 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추진
 - 외래침입종, 인수공통감염병, GMO관리 역할 강화
 - 국가침입외래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 마련
 - 생태관광 활성화와 특별자치도 자연환경 활용 생태계서비스 이용자부담원칙 확립
- 자연생태분야 정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습지 탄소흡수원 국제(IPCC)인증 추진
 - 몬순(계절풍)지역 습지의 탄소흡수원 인정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이니셔티브 선언 및 추진
 - (現)습지보전 중심 → 훼손 습지복원, 인공 습지조성 등 新 방향 제시
- 조류 및 야생동물 로드킬 저감 방안 마련
- 고품사육 농장 완전 폐쇄 추진

행복

3

1. 생활안정
2. 생활비절감 대책
3. 가게·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4.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5. 저출생·고령화 대응
6.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7.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1. 생활안정

- 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②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③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④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을 만들겠습니다
- ⑤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⑥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⑦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 ⑧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⑨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⑩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⑪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⑫ 스포츠 인재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⑬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⑭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및 농업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 ⑮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및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하여 영농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 ⑯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⑰ 어민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여 어촌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 ⑱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19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20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21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 22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23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2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25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의 기능 전환으로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 추진
 -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여가문화·교육·교통·통신·에너지 등 보장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 일하는 노인에게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 아동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디지털 세상 속 아동 안전 및 권리 보장
-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
- 아동 보호 책임 강화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안착 적극 지원
 -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 복지제도 사각지대 아동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을 만들겠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미래 연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 누구나 적정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 개혁
 - 국민연금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 등 방안 마련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목표
 -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 실현
 -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소득기준 폐지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고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강화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단계적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금 상향
 - 미혼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상향
-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정부지원 상향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한부모가족에 대해 추가 정부지원금 인상
- 청소년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기준 상향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다변화하는 가족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강화
 - 지역 맞춤형 가족센터 운영과 전문성 강화 및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 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지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책 마련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 단절로 생계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 결정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을 포함토록 법적 근거 마련
 -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원 창구 확대
-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재정비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소외되고 있는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체계 강화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 국민통합형 보훈문화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중립성 확보로 이념논쟁 등 국민통합 방해 행위 방지
 - 보훈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자의적인 보훈정책 결정·집행 방지
 - 보훈부·지자체간 시스템 연계 등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 보훈 공직자 전문성 강화로 보훈행정 기능 강화
- 세대별 보훈 행사를 세대 통합형으로 재구성하는 등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는 보훈정책 확대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내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도입으로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혜택 확대
 -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확대
 - 인사, 조달체계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훈병원 혁신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 추진
 - 휠체어 등 보조기구 대여사업 대상을 늘려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관리 체계 구축
 -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장기복무비율 대폭 확대
- 초급간부에 대한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지원 확대
-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장기근속자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군 복무 중 ‘e-러닝으로 원격강좌 대학’ 과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대학’을 의무화하여 학업단절을 최소화
 -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실화
 -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4년→3년으로 1년 단축
 - 노후된 동원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 생활 보장 강화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추진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부담분)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확대(2개소→20개소) 및 야간 실행기관 확대
 -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공공센터 구축)
-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스포츠 인재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문체육인 복지 강화
 - 고용보험 도입, 재교육사업,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 체육복지 강화
- 전문체육인 출신의 일자리 창출
 - 생활체육 지도자 체계적 양성 및 의무 배치, 처우개선 추진
 - 협동조합 창업 등 경력단절 체육인 지원
- 민간기업의 스포츠 실업팀 창단·운영 지원 확대
- 체육단체 투명성·독립성·자율성 강화
 - 선수에 불합리한 체육단체 협약 개선
 - 임원임기, 권한분산, 재정투명성, 외부감시 등 체육단체 운영 개선
- 체육 영재 발굴을 위한 민·관 지원 환경 조성
 - 학교·유청소년 클럽의 체육 영재 발굴 및 성장 프로그램 개발·지원
- 장애인체육단체 및 e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각종 스포츠단 훈련에 진천선수촌 개방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쌀 및 식량작물의 적정가격 유지
 - 과감한 인센티브와 식량위기 시 비상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선제적 쌀 생산조정 강화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
-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 농축산 디지털 유통 플랫폼, 산지경매 등 산지유통혁신, 도매시장의 공공성 평가관리 강화, 농협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 역할·기능 강화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관리권 단계적 부여
- 공익직불금 확대
 - 기존 공익직불금 확대 개편: 전략작물직불(식량안보, 생산조정), 탄소중립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 신규 공익직불금 도입: 가격안정, 청년농업인 지원, 기후변화적응 지원, 경축순환, 동물복지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및
농업재해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하여 농가 경영안정
 - (가격안정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기초안전망
 - (수입안정보험) 품목별 기준수입보다 하락시 손실 일부 보전하는 보험
-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 (재해대책)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비보험품목 피해보전
 - (재해보험) 할증 최소화 및 국가지원 확대, 보상범위와 보상을 강화
 - (기후재난지원금) 거대 재해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 시 재난지원금 지급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일부 지원
 - 통합형 농자재구매 지원사업 추진(현금성 지원 방식, 농자재보조사업 통합)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및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하여
영농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노후 대비 및 영농 세대교체
-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여 청년 등 영농 세대교체
 - 고령농의 은퇴와 영농 세대교체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단가 인상 등 개선
 - 은퇴농의 농지는 인접 농업인·청년농·친환경농 등에 우선 제공
-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및 공공비축농지 확대로 농업 혁신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 방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집적화,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 설치
 - 공공비축농지 확대로 식량안보·기후대응·수급조절·세대교체·재생에너지 등 농업혁신 추진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어업재해인 이상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 및 대응연구 사업 확대
 - 액화산소, 산소공급기, 차광막, 가두리양식장 어류 이동 선박 등 예산 확대 지원
- 저·고수온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장 및 조업여건 변화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재정비하여 어장변화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
-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보상규모 현실화
 - 재해보험 적용 어종 확대 및 신규양식수산물에 대한 정부지원
 - 재해피해 수산물에 대한 보상기준 세분화(치어-중어-성어)
- 어선 폐업지원금 상향 및 폐업 수산물양식업 업종전환 지원
 - 어선 자율감척 지원사업에 따라 폐업한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 상향
 - 폐업 수산물양식어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업종 전환 지원
 - * 폐업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및 민간·공공 등 협업 통한 기술특화, 전문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 스마트양식 및 육상양식 보급 및 지원 확대
 - 스마트양식 및 육상양식업(김 육상양식 등) 지원과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 확대
 - 양식수산물 다양화로 어종개발 가속화 지원 및 고수온 적합어종 전환 등 고부가가치 품목 전략적 연구 지원 확대

- 수산종자 및 양식어업 생산현장 장비, 기자재 스마트화 등 정부지원 추진
 - 기초적인 현장 필수 수산양식기자재 보급사업 추진
- 수산종자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 추진
- 고수온 피해 대비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우량품종 단계별 집중 방류 추진
 - 우량종자 R&D 지원사업, 수산종자산업의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방류지원사업 구분 지원(소득증대용과 수산자원회복용)
- 양식수산물 수매 및 비축 추진으로 유통환경 조성
 - 지역거점별 저장 비축창고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전국 단위 콜드체인 기반 수산물 공급망 구축
 - 산지 위판장, 수산물 산지 유통센터 등에 냉장·냉동 저장, 자동 분류, 냉장 운송 인프라 확대 구축
 - IoT 기반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온도·위치 실시간 추적 등) 도입 추진
- 어업시설물 전력 효율을 위한 재생에너지(소수력/태양광) 자가발전 양식장 구축 지원

어민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여 어촌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 어민소득 안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인상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수준 확대
- 바다정원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유휴어항 수역에 해조류 이식·관리를 통해 탄소흡수·저장, 중간육성, 바닷속 체험관광 등을 위한 블루카본 바다정원 조성
 - 공유수면과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적정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사회혁신과 마을 현안해결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예산확대로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
- K-Sea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유망 품종(김 수출) 및 비품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육성 및 지원 확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가공설비 및 수산물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동·서·남 권역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확대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사업 대상지 확대
- 어촌 고령화 심화에 따른 해양수산 어선원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선원 장기근속 방안 마련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 변경·재개발(인지, 정서, 건강을 포괄하는 학생진단 도구 개발)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으로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지도 강화
 - 교육청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협업)
- 초등 정서행동·학습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전문교사 배치
 - ADHD, 우울·불안, 난독증, 난산증, 경계선지능, 다문화 배경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정서행동·학습지원 강화
-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EBS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형 학습센터 운영
 - AI 학습서비스와 연계된 1:1 맞춤형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 EBS 교재(e-Book) 초·중·고 전 학년 무상 제공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 내 인문학 교육 강화
 - 문학·철학·역사·윤리를 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인문독서·토론 수업 활성화
 - '질문 중심 수업' 확대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체계 마련
- 청소년 인문활동 활성화
 -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 독서토론대회 프로그램 등 운영
 - 청소년 스스로 주제와 방법을 설계하는 '청소년 인문연구 프로젝트' 지원
- 대학 인문 교양교육 강화
 -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 개설 및 교양과정 혁신 지원
 - 인문+AI, 인문+환경, 인문+공공정책 등 융합형 인문 교양과목 확대
- 인문학 전공 인재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인문계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인문100년장학금) 확대
 - 인문계 대학원생의 연구·출판 등 학술 활동 지원 강화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고교 직업교육 혁신 추진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유망 분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
- 학생층원 미달 특성화고는 일반고로 전환 지원, 나머지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로 일원화해 선택과 집중 추진
- 고교학점제를 통한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

■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 3+1 전문학사 활성화: 직업계고 3년 + 전문대 1년 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
- 2+3 마이스터 학사 도입: 현장 경력 2년 이상은 유사 전공 1년 인정, 학사과정 3년 이수로 일·학습 병행형 학위 취득

■ 전문대학을 개방형 대학(Open University)으로 재구조화

- 성인학습자, 직장인,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학위 평생교육 확대
-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재편해 생애전환기 재교육과 역량강화 지원
-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지원 확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

■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위한 방안 마련

-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 포함 등 공사비 투명성 담보

■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

■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

- 부동산가격·금융시스템안정 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 정례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 택시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생활임금 보장으로 인력대란 해결, 통합전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운전자 편의 제공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택시업계 발전 지원
 - 택시 준대중교통 인정, 택시호출플랫폼 활성화·공정화 실현
 - 수요맞춤형 공공형택시 시행지역 및 지원 확대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 택시 고급화 및 넓은 택시의 교체사업 지원 확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화물운송업계 종사자 지원 확대
- 전세버스운송사업 표준운임제 도입
- ‘서민의 발’, 필수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대리운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법 제정
-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 이륜차 등 종사자 권익보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생활물류시설 첨단화 지원 통한 노동 환경 개선
- 중고차 및 튜닝업계 육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
- 저가항공업계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농어촌 맞춤형 교통시스템의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AI 지능형 교통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어촌 대형교통수단 및 택시 등 운송수단의 최적화
-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횟수 증차 등 국민편의 확대·안전성 강화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용 지원 확대
- 어르신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 장애인용 미디어 단말 제공·보급,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제작 역량 지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학생·청년에게 1인 미디어 제작장비 무상 임대
 - 장애인 및 취약계층 학생이나 청년의 미디어 창작 지원 및 크리에이터 기회 제공을 위해 제작 관련 장비 무상 임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 인프라 확충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 활성화
 - 위탁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소 확대 등 인프라 확충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 동물 학대 범위 확대,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
-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홍보 제한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및 동물복지 기준 마련·예산 현실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인센티브 제공, 동물복지인증축산물 판로확보 등
 - (농장동물복지직불)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소득 감소분 지원

-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
 - 동물원·수족관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및 지자체 관리 강화
 -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능 강화
- 실험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고, 국가 봉사동물과 레저동물 보호 및 관리체계일원화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적극 지원
 -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및 민간입양 지원 확대
 -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관리체제 확립
-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의 기능 전환으로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 주도 하에 지역별 중장기 아동·청소년·노인 관련 복지시설 구조조정 및 확충 종합계획 수립
 - 어린이집 등 과잉 복지시설의 기능 전환 등 구조조정 계획 수립
 - 노인요양원 등 확충 필요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기능 전환 수요조사를 통한 확충 계획 수립
- 어린이집 등 기능 전환 희망 복지시설을 재가서비스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이나 마을도서관·키즈카페·돌봄센터·육아정보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로의 전환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 전환 희망 시설 파악
 - 지역별 신규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 과잉 시설의 기능 전환 유도
- 기능전환 규제 완화 및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생활비절감 대책

- ❶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 ❷ 국민의 정보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❸ 1인가구·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❹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를 절감하겠습니다
- ❺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❻ 대학생·청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주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❼ 기후 농정으로 식량자급 확대하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 ❽ GMO완전표시제 도입,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❾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로 문화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❿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비절감 대책 01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

-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도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월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 다자녀가구의 대상주택(면적) 범위를 상향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국민의 정보통신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 및 OTT 서비스 국내외 가격차별 해소 유도
-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
-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 잔여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확대(20%→ 50%)
- 5G 백홀의 공공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에 설치
- TV 유희대역 활용한 Super WiFi로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
- 우체국 활용,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인가구·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1인가구·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확대
 - 철도차량기지·GTX환승역·공공청사 등 복합개발로 직주근접 가능한 주택 공급
- ‘생애 첫 독립’ 1인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지도’ 작성 및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 복잡한 전세·월세 계약 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
 - 1인 가구 맞춤형 셰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 강화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를 절감하겠습니다

- 청년패스,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 발행
 - 정액권 구매 후 광역교통망을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 가능
 - 지역간 교통 이용권 격차 해소 및 국민 선택권 부여로 대중교통 활성화
 - 지역마다 '상이한' 패스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패스 도입으로 국민선택권 부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의대 쏠림 완화를 위한 이공계장학금 확대
 - 이공계장학금 신청요건 완화, 대학원까지 장학금 확대
- 인문학 전공 인재를 위한 국가장학금(인문100년장학금) 지원 확대
-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지원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의무상환 개시 전 대출이자 면제 기준 확대(전문·특수대학원생 포함)
 - 일반 학자금대출과 병행 운영하여 가구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편
 - 국가장학금의 형평성 강화 및 불공정 요소 개선

대학생·청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주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대학생·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주거복합지원센터 공급
 -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 기반 위에 교육, 취·창업,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복합지원센터 단계적 공급
- 초·중등 폐교 및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확대
 - 폐교(이전) 또는 폐교예정 학교, 국·공립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합형 행복기숙사 적극 추진
 - 기존 노후 기숙사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추진
- 지역 상생을 위한 주택 활용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대
 -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선정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기후 농정으로 식량자급 확대하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식량자급 확대, 국가 먹거리 전략 및 식량계획 수립, 위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 품종개발, AI 관측·재해예측 고도화, 노지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정밀농업 확산,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 ‘기후취약 품목’ 지정, 계약재배 비중 확대 및 이행지원제 도입, 비축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처 다양화 등
-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
 -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순환, 농촌지역 식품사각지대 해소

GMO완전표시제 도입,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식생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단계적 확대 추진)
- 청년, 산단 근로자의 건강 식생활 보장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미취업 청년 식품 바우처로 식생활 지원
 -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월 1회 이상 공급
 - 초등학교에게 과일간식지원으로 식습관 개선, 국산과일 소비확대
- 학교급식 및 군급식 제도 개선
 -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지역별 급식비 격차 완화
 - 장병의 건강 식단 보장 및 군급식의 지역산·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소비 확대
- 농식품 바우처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식생활 지원 강화
 - 생계급여가구 등 취약계층, 재난·사고·질병 등 위기상황이나 긴급한 빈곤 가구에 제공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로
문화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불우환경 예술영재 발굴을 위한 「한국판 엘 시스템아」사업 실시
- 생애주기 3대 문화패스 신설 및 확대
 - “청소년 문화패스” 신설 지원 추진
 - “청년 문화패스” 지원 확대로 청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생애전환 문화패스” 도입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
 - 초·중고 학교 단위(학년·학급)의 최소 연 1회 문화향유 지원
 - 대학 문화예술 동아리의 프로그램 및 작품 발표 지원
 - 인문학 창작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문화·체육 상품 및 입장에 특화된 “문화형 온누리상품권” 발행 추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 AR·VR 활용 지역별 스마트체육관 건립 및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 ‘스포츠가치센터’ 전국 확대
-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충
- 개방적 파크골프장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어르신 건강권 확보 지원

- 어르신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 어르신 전문스포츠센터 건립 및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추진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 초등학생 체육수업 확대 및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국비지원
- 방과 후 체육프로그램 확대

■ 지역중심의 체육활동 지원

- 종목별 생활체육 동아리(클럽) 장비·활동·체육지도자 교육 등 지원 확대
- 지역화폐 환급대상에 스포츠업 추가 및 환급규모 확대

3.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 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②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③ 소비촉진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 ④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⑥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⑦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⑧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⑨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⑩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⑪ 공공임대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⑫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패널티 축소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 및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키오스크·자동화기기 등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 인하 및 원원하는 배달생태계 조성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
- 스마트 공방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K-소상공인) 집중 육성
-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 운영 추진

소비촉진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 대폭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 확보
-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추진
-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신청요건 현실화로 중소형마트 참여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골목형 상점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등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금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 폐업지원금 현실화
 - 폐업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폐업 등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제외 추진
 - 노란우산 공제 해지시 기타소득세 완화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직업훈련 교육 확대
 - 재취업·재창업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국 지방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 및 화재공제 보상한도 현실화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검토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 AI·핀테크 기법 등을 활용한 여신심사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
 -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 병행
-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
- 소외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점포 운영
 - 도시지역 특화점포(디지털라운지, 시니어라운지 등) 및 농촌·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 점포 운영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 금융거래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의 비금융정보를 적극 반영
 - 상환능력을 더욱 정교히 평가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민간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소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대규모 펀드 설치
 - 과잉추심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 지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추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사각지대 해소
-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검토
 - 일정금액 이하 채무(예: 3천만원)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대리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한 보험가입자 부담 경감
 -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대상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
 - 차년도 환급액 발생 시 보험사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도록 개선
-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
- 생명보험·손해보험·독립보험대리점(GA)을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 질서확립 유도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택·일자리시설 공급 확대
- ‘공실폭탄’ 방지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등 추진
- 공공분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
 - 리츠회사 주식을 계약금으로 활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 및 향후 리츠 주식 확보로 10년 후 소유권 100% 확보
- ‘안전하고 불편없는’ 살고 싶은 주택 위해 층간소음·아파트 사전하자 문제 해소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확대
 - 신축 공동주택 사전하자문제 해결
-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해소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
 - 서민·실수요자가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모기지 프로그램 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역·면적·가격 등 고려한 금융정책 마련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유도

- 중장기 금리변동 불확실성 등에 대한 차주의 위험부담 경감

■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안정 보장

공공임대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돌봄서비스 특화 주택)
- 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 추진

■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확대

-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등
-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 설립으로 투명한 자금조달원 공개 및 개발이익 공유

■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 해소 위한 대책 마련

-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 활성화
-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위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
- 영구·국민임대 주택 주거환경 개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및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누구나 가입가능한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 마련 및 임차인에서 임대인가입으로 전환 유도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도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부담 완화
 -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 전세 관련 부담 완화정책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 확대 추진
 - 지자체별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4.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 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②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모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③ 직장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④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 ⑤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⑥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⑦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⑧ 여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⑨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⑩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를 실현하겠습니다
- ⑪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⑫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100만 사회복지인력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⑬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⑭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취업자)의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은 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수행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각각의 개별 입법을 통한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여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기업 등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용자)책임 회피 위해 가짜 3.3계약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및 오분류 방지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명확화, 기업 등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권 제도화”
- 「근로기준법」 상시 5인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사업주 지원
-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업무시간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노동행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실질화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등 정규직 채용 및 고용원칙 확립 후 민간확산 추진
- 해고나 비정규직 고용이 과다한 사업장의 사업주분 고용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유도
-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시 대폭 지원
-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등 지원기구 확대 및 권익 보호 활성화
-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추진
- 퇴직연금제 의무화 및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 보장
-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보장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모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하고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 구축함으로써 저임금·미조직노동자 보호
 - 국가 등에 의한 예산 지원이나 공공조달 민간 기업 확산 추진
 - 단체협약 자동효력확장 또는 행정명령에 의한 효력확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노동시장 내 양극화·불평등 완화
 - 미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대화 및 노사관계 구축 지원
- 교섭권보장·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
 - 용역 등 하도급 노동관계에서 인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 파견근로계약에 파견수수료 명시 및 상한 설정 도입
 -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성별(남·녀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 초기업(업종·산업·지역)교섭 지원 위한 임금정보 제공 및 격차 해소방안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일터’ 적용 위한 법·제도개선
 - 직무·직위·근속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공공부문 종사 공무원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공무원위원회 법제화

직장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 사업(장)내 노사자율 협의를 주도할 “근로자(노동자)대표 위원회” 상설 제도화
 -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보호 등 제도적 기반마련
 - 계약직, 파견직, 사내하청노동자의 경우 인원비례로 “근로자(노동자)대표 선출
 - 근로자(노동자) 대표위원회에서 노·사 자율적 직장내 노동조건, 고충처리 등 논의
-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ILO 190호(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비준 추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국가 대위권 강화로 노동자에 미지급된 체불임금 “Zero 시대” 추진

- 임금채권소멸시효(3년)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 * (현행)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지급 [도산시] 최대 2,100만원 [간이 최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개선) 최종 3년간 미지급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방지 및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대지급금회수 전담기구 설립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처벌 양형기준 강화 ▲체불임금에 대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대지급금회수 국세채납처분절차에 따른 처리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방지

■ 각종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위원회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분야별·대상별·정부부처별 고용정책심의회 노·사의 실질적 참여보장

■ 노동법원의 설립과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 노동분쟁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립 추진(조직개편)
-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침해 ▶공정한 노무제공계약 미체결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기능 부여 제도화

■ 적정노동기준 보장을 위한 근로자(노동자)지원행정 강화

-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제 도입
 - * 각 산업 현황 및 지역 등의 (생활)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지수를 압축하여 “일자리 평가지표” 개발 및 이를 통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 국가 및 지자체 발주·용역·위탁사업자의 입찰 및 선정과정에 있어 “일자리 평가지표” 적용 및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기업 우대
-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공인노무사에 의한 진술조력권 보장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 자영업자 세부 특성 (근로자 고용 여부, 업종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 보험료 부담,
-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임의가입 적용대상자의 당연가입으로의 전환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업무상 질병유형별 재해조사기간 구체적 법정화
-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원인불명인 희귀질환의 경우 등 산재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상병수당제도와 연계)
-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명문화
- 특정 업무상 질병에 해당 여부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으로 전환(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 대상 질병 확대)*

* 재해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목록상 질병에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 입증(국가인권위원회(2012.5) 권고)

■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체계 구축

- 업무상 질병 등 산재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산재판정기구에 국선대리인(노무사) 제도 도입
- 산재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 회의록 등 산재보상 관련 정보 공시 확대
- 산재판정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정부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운영*
 - * 노동안전분야 입법제안 및 예산, 행정조직 개편 등 전문성과 독립성 부여
- 모든 산업·업종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중대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예방체계 구축
- 산업안전관리 기준 및 표준을 연구하고 관리, R&D 등 전담기구 확립으로 산업 전반 안전관리기준 일원화 및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관련 기술 보급 등 추진

■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 매년 ①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②안전보건투자 규모,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④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 ⑤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해 벌칙 도입으로 자율규율 예방체계 안착
-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측 모델 개발 및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여 모든 안전관리 활동 통합관리 및 실시간 정보 공유
- 안전보건교육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및 야간근로자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장애 예방 방안 마련
- 신재생·수소 에너지 등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 작업현장내 유해·위험발생 농후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 산업안전분야 등 원·하청 노사 공동 참여 보장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 해소
- 성·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피임과 임신중지 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여성청소년에게 무료지원되는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 백신 전환 검토
- 산후조리 지원정책 공공성 강화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17개 시도별) 확대 설치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통해 이용 수요 제고 및 비용 절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여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성별임금격차 개선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임금격차 해소 개선계획, 개선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공개
 - 공시 대상 의무화 민간사업장 단계적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
 - 성별 임금격차, 성별 근속연수, 승진 및 연수, 육아휴직 후 근속차별 등 차별 지표
-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 강화
 -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 권익제고 용어로 변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여 기관·단체 등에 포상 규정 마련
 -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및 주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 개선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장시간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및 기업지원
 -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차휴가 활성화
 -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 연차휴가 저축제도(예: 3년 이내 이월·적치) 도입 및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의무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선
 -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 업무특성을 적극 감안하여 제도화 추진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 확충 중장기 로드맵 ‘2035 국가장애인전략’ 수립
 - 원스톱 통합 개인 맞춤형 공적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이동권 보장 확대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교육권 보장 확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 적정 정원 확보
 - 장애대학생 장학금 혜택 확대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국비지원 확대
- 소득·고용 보장 확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종전의 3급 장애인까지 수급 범위 확대) 추진
 -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고용활성화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 건강권 보장 확대

- 장애인주치의 제도 확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추진
- 발달장애인 자립 안정성 강화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심리·휴식·교육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시설·서비스 확충 및 제도 개선

■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의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 준수

-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 마련

■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보장 강화

- 국가·지자체 등과의 계약상 권리 강화(예술인 의사에 반하는 계약 불이행 금지)
-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확대 및 벌칙 신설, 국가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 예술인보호관의 개방형 직위 전환 추진

■ 창작자 보호를 위한 계약관계의 합리적 개선

■ 청년 예술인 및 예술대학(원) 학생 지원

- 예술대학(원)의 공공 연계 프로젝트 및 산업화 지원 확대
 - * 창업지원에서 성장 단계별 지원(예비창업→창업→성장→도약)
- 청년 예술인의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턴십 확대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100만 사회복지인력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인력 임금 현실화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추진
 - (1단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기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100% 달성 추진
 - (2단계)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 도입. 동일 사회복지시설 간 지역별 임금 격차도 해소
- 사회복지 거주시설 인력 3교대제 및 이용시설 인력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 사회복지시설 인력 추가 배치 및 지원 인력 확대
 - 사회복지인력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
- 사회복지인력의 안전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및 연수원 설치 추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을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격무에 맞는 급여 지급
 - '27년까지 9급 초임보수의 실질적 인상 추진
-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타파
- 공무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직위제' 등 도입 추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 강화

-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기능의 이해상충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역할 강화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를 합성·변조한 생성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요구권 신설

5. 저출생·고령화 대응

- 1 결혼·출생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겠습니다
- 2 100세 시대, 청년으로 살아갈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3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4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 5 결혼·출생의 가장 큰 고민! 주택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6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7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보듬겠습니다
- 8 고령자 친화주택·은퇴자도시 통해 어르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9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10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11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결혼·출생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겠습니다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정부가 어린이에게 펀드를 가입해주고 정기 입금하는 방식
- 부모도 매칭 허용, 성인 전 인출 금지, 학비·창업비용 등의 용도 활용
-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세제혜택 부여
- 학교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효과 제고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

100세 시대, 청년으로 살아갈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사회 진출 연령대 상생을 감안,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 각 부처별, 지자체, 단체별로 상이한 청년 기준을 일원화 하여 정책 대상자 혼선을 방지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국민 편의 증진
 -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가족 친화적 소득세체계로의 개편방안 마련
 -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 마련
 -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 수립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녀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
 -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5%p(최대 20%), 공제한도 100만원 상향
-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
-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체육시설 등 예체능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결혼·출생의 가장 큰 고민!
주택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에게 우선 공급 (소득·자산 등 고려)
 - 자녀수에 따라 분양권환급감면 추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 특별공급(민간, 공공분양) 신혼부부 기간 요건 기존 7년에서 확대(10년까지)
 -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로 대상 확대 추진
 - 민영주택 건설공급 시 9세 이하 자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소득·자산 고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제도 허용
 - 고지방식 전환으로 자유로운 제도사용 환경 마련
-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 제고, 긍정적 인식 확산
 -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집중기간’ 등으로 개선
- 저소득 근로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추진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프리미엄 급여 추가 지원
-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추진
 -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보험료 국가 지원 검토
 - 한부모 가족, 저소득 가구 대상 우선 사업 추진, 육아휴직 기간 발생하는 국민연금 납입 공백 사각지대 보완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보듬겠습니다

■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단계적 확대(현행 최초 2일만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확대 및 중복회차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 난임부부의 심리적 안정 지원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국 광역단위 확충
-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지원, 유산·사산 부부도 지원
- 난임치료 부부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증진을 위한 '부부 동행휴가제' 확산

고령자 친화주택·은퇴자도시 통해 어르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추진

- 6080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친화형 건축 활성화
 - 미끄럼방지 바닥재, 주택 내 응급비상벨,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 등

-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균형발전 기반 조성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 신탁 신청 및 이용에 드는 비용은 무료
-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되, 치매·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
 - 치매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청자 본인이 재산 관리
 -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자가 재산의 세부 관리·사용 방법을 지정
- 공공기관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
 -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 및 생활 편의, 사회참여 활동 등을 종합 설계하고 신탁 재산이 해당 내용에 사용되도록 지원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및 시민사회 논의 진행 및 2025년내 입법 추진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점진적·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 구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의 물적·인적 지원 강화
- 중소기업·영세기업 노동자 퇴직연금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가입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하 → 100인 이하로 확대 및 가입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 100% 지원(~’30년 까지)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대상 기준을 현행 기업규모 1,000명 이상→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 업종·지역(산단) 기업체 공동으로 신청시(신청노동자 100인 이상) 추가 지원
-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자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60세 이상으로 상향
 -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소외되는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가입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취업자)로 확대

* 노동자 부담금의 일정비율 정부매칭 지원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지정

- 외로움 인구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 대응 정책 수립 등 담당. ‘뉴노멀(New Normal)’현상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집단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 사회활동 참여, 식생활 등 일상생활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지원 정책: 청소년 및 노년층의 우울, 분노, 스트레스 상담 및 검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및 취미활동 등 지원 확대. 치유목적 원예활동 등 체험장 조성
 - 안전관리 강화 정책: 화재,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 감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기기·장비 보급 및 지역사회 신속지원체계 구축
 - 노인·장애인·1인가구 생활 인프라 확충: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주택 및 공유주거(share house) 보급 확대
- * 공유주거: 공동주택으로서 주방, 창고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여러 가구가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 절감

6.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 1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부담을 덜겠습니다
- 3 무능과 불통을 견어내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4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5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 6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 7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 8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 9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간·야간·단기 보호, 영양식 식사 지원 등 재가서비스 대폭 확충
 - 치료 따로, 돌봄 따로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건강상태에 적절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 지원
 - 국가와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적극 확충 지원하며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보호 강화 추진
- 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원(퇴소)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도심지역에 촘촘히 확충
 - * 지원주택 :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 단지에 공동식당, 빨래방 등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을 지원.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 등도 설치하여 복지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 정부 유관부처 및 선도 지자체 관계자, 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수행 모델, 재가서비스 및 인프라 단계적 확충 계획, 관련 법·제도개혁 방안 등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부담을 덜겠습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거점병원 전면 확대로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단계적 확대로 수술·중증환자 간병부담 완화
-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배치 및 평가 기준 개선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요양병원 입원 등급 결정의 신뢰성 확보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대책 마련
-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확립

■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에 적합한 맞춤형 간병서비스 제공
- 간병인 교육과정 수립, 의료기관 직접고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

-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강화
-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무능과 불통을 걷어내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현 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개혁안’ 마련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 틈새돌봄 확대 등으로 돌봄공백이 없도록 이용시간과 이용일수 확대
- 재정지원체계 마련 전까지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지

■ 놀이 중심의 영어 및 다언어 방과후·특성화 교육 강화

- 방과후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을 확대해 사교육비 절감 유도
- 다문화·문화다양성 교육과 연계하여 공교육 내 언어 경험 기회를 확대

■ ‘7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조기 사교육 실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영유아 사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 자녀 취학 전후 차등지원 체계 폐지
- 정부지원 비율 확대로 이용가구 자부담 단계적 축소
-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확대

■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 주단위 최소근로시간(15시간) 보장 추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한 돌봄수당 확대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 관리기능 강화 및 민간 아이돌봄 책임운영을 위한 등록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설·인력 등 기준 마련
-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보수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과밀학급·과대학교 등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 아침 7시30분~9시, 방과후 오후 8시까지(방학 중 오전 8시~오후 8시) 운영
- 학교 또는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 지자체가 돌봄교사 확충 및 운영 전반 전담 (기존 돌봄교사는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 및 관리 유지)
- 돌봄전담사 교실당 2명 배치(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보호자 인솔도우미·통학안전지킴이 및 돌봄보안관 배치(어르신 공공일자리 활용)
-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질 높은 돌봄교육 제공,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구성
- 돌봄교실 전용 출입구 설치, 출입시 학부모 문자 알림 서비스, 돌봄 중 학원 이용 가능
- 친환경 급식 및 간식 제공(방학 중 점심 포함), 지역연계 우수 급식업체 활용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추진
 -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다양한 특기적성·예체능·기초학력 프로그램 마련으로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체계적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풀 제공, 방과후학교 모니터링·컨설팅 등 질 관리 체제 마련으로 학교 부담 최소화
 - 학교별·지역별 특색 프로그램 지원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지자체·공공기관 협력체제 마련
 -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함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추진
-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
 - 명실상부한 공교육 제도로써 방과후학교 위상 및 역할 강화
 - 기초학력보장, 예체능교육 강화 등 방과후학교 목표 명시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 특수교육 교실의 안전 강화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 특수교사 및 보조 인력(특수교육 보조원 및 치료사) 확충
 -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대응 매뉴얼 개선(폭력 방지 및 교사 보호 조치 마련)
- 특수교사의 업무경감 및 지원 강화
 - 행정지원 확대로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 교원지원청 내 특수교육 갈등조정 지원팀 운영
 - 특수교육 교사 대상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도입
- 통합교육 내실화
 -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교원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 및 복수 전공 확대
 -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제도화
 -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국가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범부처 차원 비상대책 마련
-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검사 결과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 시행
-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 교직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학교위기 개입 지원 확대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 이상 의무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예방 지원

- SNS, 게임 등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가진단형 디지털 스트레스 평가 도구 개발 및 상담 연계 시스템 구축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기회 확대
- 초·중·고 체육(전담)교사 증원 및 체육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8세~18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정서활동비 지원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강화

- 청소년 정책·예산 복원으로 청소년의 역량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한 체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학습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예산 확보
- 청소년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급식비 단가 현실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 성장지원 기반 마련

정서 행동 문제, 경계선 지능 등 고위험 청소년 정책 강화

- 고위험군 청소년 맞춤지원을 위한 장기 상담지원과 야간 및 긴급 상황, 의료지원 등 대응 강화
- 고위험군 청소년 지원 특화 전문시설 확충

청소년 상담 1388 통합 콜센터 설치

- 중앙 대표 콜센터 설치 및 24시간 전화상담 운영으로 전문적 지원 강화

7.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 ❶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 ❷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❸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 ❹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❺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❻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01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
-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 보상체계 강화

■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추진
- 의료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 및 교육·수련 환경 개선

■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및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 통합적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진료권별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성 평가 및 개선안 마련

-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및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제도 개선
 - 의료인 공제조합 및 공제보험 제도 활성화 지원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및 조정·중재 실효성 제고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공공병원 없는 곳은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합의 추진
-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설치·운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조직 합리적 개편
 -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용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 논의·확정·추진
-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
 -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자의 건강권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 확립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
 - 각 전문 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 환자·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의료기관별로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 도입
 -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차 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확립
 -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보상체계 마련 및 방문·재택 진료 수가 현실화
 - 등록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
-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 장기요양 재가·방문 진료 확대를 위한 재택의료기관과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
 - 편의성·접근성 고려한 방문진료-비대면 모니터링 연계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제로
응급실 뱅뱅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환자 중증도 맞춤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설정 및 보상 강화
 -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및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기능가산 수가 신설
 - 질환·기술별 응급의료 기준 수가 마련 및 성과기반 가산 수가체계 마련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을 위한 중앙-권역 센터 설치
 -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불가사항 사전공지 원칙 도입
 - 응급환자 거부 시 사유 보고 의무화 및 단계별 대응책 마련
-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 중증·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및 의사·간호사 등 별도 인건비 기준 명확화
 - 응급의료기금의 인건비 사용 근거 마련 및 운영 효율성 평가제 도입
 - 중증·응급질환 대응 전문과목별 24시간 당직 전문의 비상 진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
-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 공정한 보험료 부과기준 확립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억제 및 사전예방 강화

- 대리수술,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에 대한 면책 및 신고포상 확대
-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강화

■ 노인·어린이 질병 예방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장 확대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항체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청소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중·고생까지 확대

■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

- C형 간염 등 완치 가능한 질병에 대한 국가검진 및 관리체계 개선
-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개선
 - 대상 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 확대 및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희귀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업무체계 이원화로 인한 정책 공백 해소
 - 희귀질환자 보건의료·복지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적극 대응
 - 등록·통계관리 고도화, 실태조사 확대 등 관련 예산 확보
-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지정
 -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학교·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 등 지원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관련 학교·지역사회 인식향상 교육·홍보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의 의료법적 근거 확립 및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
 -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 보장
 -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 구축
 -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 방지
 -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차단으로 환자안전 강화
-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
 -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적 활용 기여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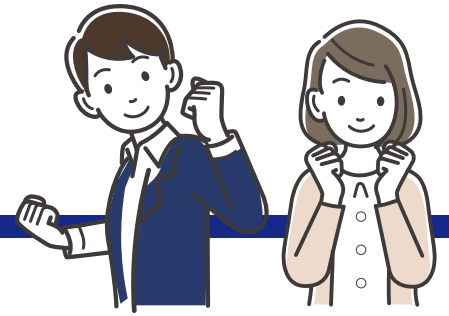
대상별 공약

- | | |
|-----------|--------------|
| 1. 아동·청소년 | 8. 소상공인·자영업자 |
| 2. 청년 | 9. 중소·벤처기업 |
| 3. 중장년 | 10. 농어업인 |
| 4. 어르신 | 11. 가족돌봄 |
| 5. 여성 | 12. 저출생 |
| 6. 장애인 | 13. 동물반려인 |
| 7. 직장인 | |



-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재설계
- 위기 아동 발굴 및 아동 보호 책임 강화
- 아동·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확대로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제도 개선
- 학교폭력·어린이보호구역 등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
- 정서·행동위기,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상담 1388 통합 콜센터 설치
-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예방 지원
-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세상 속 아동·청소년 안전 및 권리 보장
-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혁신
-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 초등 정서행동·학습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 EBS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고교 직업교육 혁신 추진

- 학교 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 체육 영재 발굴을 위한 민·관 지원 환경 조성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선 지원
- 초·중·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 청소년 인문학 교육 강화
-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강화
-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온라인교육·미디어제작 지원 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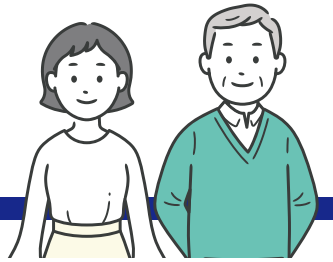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추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지급 추진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모든 공공기관으로 의무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대폭 확대
-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지원 대상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지자체별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 기반 위에 교육, 취·창업,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연계된 주거복합지원센터 단계적 공급
-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 대폭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가해자 처벌강화
- '생애 첫 독립' 1인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여성 1인가구 등 청년의 안전한 정주환경 위해, 범죄예방시스템과 긴급대응 체계 강화
-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 강화

- 청년 맞벌이 부부 위한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자면제 대상 확대, 이공계·인문계 장학금 확대
- 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청년지원 체계 강화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청년을 위한 미디어 창업 허브 조성(Startup Station) 및 한류의 강점을 살린 청년 글로벌 시장 진출 도약 지원,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 청년 문화패스 지원 확대 및 거리병산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한 청년패스(정액권) 발행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미취업 청년 식품 바우처로 식생활 지원, 군급식 제도 개선
- 병사 통신 요금 할인을 확대(20%→ 50%)
- 법적 청년기준 현실화, 청년으로 살아갈 권리 확대

중장년

대상별 공약 03



- 자녀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자녀 1인당 +5%)과 공제한도(자녀 1인당 +100만원)를 상향
-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
- 근로자 본인,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거리병산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한 국민패스(정액권) 발행
- 전문대학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 거점이 되는 개방형 대학으로 재구조화하여 생애전환기 재교육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장학금도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거점병원 전면 확대로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확립
- 간병인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직접고용 등으로 간병의 질을 제고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대상별 공약 04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및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의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

〈건강권 보장 확대〉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 수요도를 고려한 노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 장기요양 재가·방문 진료 확대를 위한 재택의료기관과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 편의성·접근성 고려한 방문진료-비대면 모니터링 연계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회활동 참여 지원 확대〉

-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무상 어르신패스 발행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 생애주기 3대 문화패스 신설 및 확대(‘생애전환 문화패스’ 도입)

- 국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제공(지자체, 민간 매칭 연계한 어르신 ‘실버여행’지원)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파크골프장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노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노인 전문스포츠센터 건립 및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추진
- 은퇴 고경력 연구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확대

〈주거 지원 확대〉

-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돌봄서비스 특화 주택)
-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추진
- 6080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 지원 및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친화형 건축 활성화
-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 · 균형발전 기반 조성
- 대학+평생교육+헬스케어가 결합된 한국형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도입

〈생활 안전 지원〉

- 치매·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활성화
- 주말, 연휴 등 취약 시간·기간 피해 방지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피싱, 스미싱 디지털 민생안전 대응 강화

- 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 노약자·어린이 등 화재 취약대상을 위한 경량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 지원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구매시 지원 확대 등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고령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 보조기구 대여사업 대상 확대, 고독사 예방 장기 대책 마련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 추진

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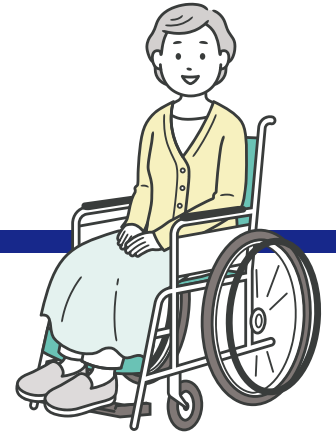
대상별 공약 05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
-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 여성안심주택,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등 여성안전 사회 구축
-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여성차별 없는 일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
-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및 채용 기업 세제 지원 강화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 성·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여성인권과 평화재단' 설립 추진

장애인

대상별 공약 06



〈장애인권리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 확충 중장기 로드맵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
- 원스톱 통합 개인 맞춤 공적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이동권 보장 확대〉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교육권 보장 확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 적정 정원 확보 및 보조 인력 확충
-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으로 통합교육 내실화
- 장애대학생 장학금 혜택 확대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국비지원 확대

〈소득·고용 보장 확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중전의 3급 장애인까지 수급 범위 확대) 추진
-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고용활성화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건강권 보장 확대〉

- 장애인주치의 제도 확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 지속 확충
- 장애인체육단체 및 e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 미디어 복지 강화
- 장애인용 미디어 단말 제공·보급,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제작 역량 지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학생·청년에게 미디어 창작 지원 및 크리에이터 기회 제공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추진
- 발달장애인 자립 안정성 강화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시설·서비스 확충 및 제도 개선

〈여성장애인 차별 개선〉

-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경계선지능인 지원〉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을 위한 지역사회체계 구축 지원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명문화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방안 마련
-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휴식·재충전 보장〉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 ‘1박2일’ 기한의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신설
- 국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제공
- 워케이션(Workcation) 관광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집중기간’ 등으로 개선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 제고, 긍정적 인식 확산

- 저소득 근로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추진
-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추진

〈생활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 근로자 본인,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대상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상향 및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추진
-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부부소득과 자녀수를 고려하는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로의 개편 방안 마련
-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 정액권 구매 후 광역교통망을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할 수 있는 국민패스 발행
-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부당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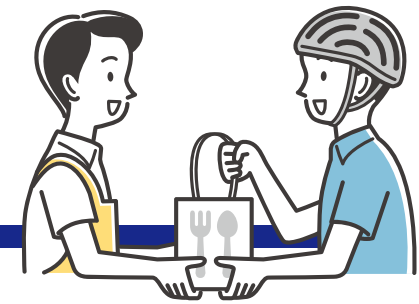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타파

〈정년연장 및 노후소득 보장〉

-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자 수수료 지원 등 중소기업·영세기업 노동자 퇴직연금 지원 강화
-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전형 노동자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안전망 강화〉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대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체계 구축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패널티 축소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 및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키오스크·자동화기기 등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꿈수 인상 방지
-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 인하 및 원원하는 배달생태계 조성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
- 스마트 공방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K-소상공인) 집중 육성
- 광역형 소공인 도제교육센터 운영 추진

〈소비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 대폭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 확보
-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신청요건 현실화로 중소형마트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정경제 확립〉

-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으로 입점업체 보호·상생협력 강화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 폐업 등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전국 지방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 현실화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중소·벤처 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 K컨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경쟁력 확보 주력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예산 대폭 확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확산 추진
- 탄소중립 팩토리, 안전한 휴먼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3.0 추진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부리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 에너지 저소비 및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

〈판로지원 및 지속성장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비중 확대
-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 및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
-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 포함하여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로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 제공
- 중소기업 노동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우수 청년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추진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교통비 지급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재추진
-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및 중소기업 AI 스케일업 펀드 조성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플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창업단계) 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성장단계)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강화
- (상장단계)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 (지역투자)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
-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활용 격차 해소
-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비수도권 지역의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지분투자 형식으로 인큐베이팅

〈중소·벤처스타트업 R&D 지원〉

- 중소·벤처 R&D 예산 확대 및 성공적 사업화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
-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 확대 및 소셜벤처 예산 반영 추진
- 여성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 대학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역 R&D 거점으로 집중 육성
-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로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 지역 특색 및 산업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규제혁신〉

-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실효성 강화
- AI를 활용한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스템 개선
-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
-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과 정책 집행 및 사회분위기 조성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효성 강화
- 기술보호 전문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

-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기후적응형 농업으로 품종개발, AI 관측·재해예측 고도화 등
- 친환경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 제도 개선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 과학적인 예방 방역체계 구축 및 살처분 보상 기준 개선, 국가책임방역 강화
- 농촌지역 식품사각지대 해소,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단계적 확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재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쌀 및 식량작물의 적정가격 유지
- 기존 직불금 확대 개편, 신규 직불금 도입(청년농, 기후변화적응, 경축순환, 동물복지 등)
-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하여 농가 경영안정
-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및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확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

- 농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 연금 지급 및 난방·복지·영농 에너지 사용
- 의료, 돌봄, 생활,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등)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
- 임업직불제 확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
-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 확대,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지원
-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 및 연수제 도입, 창업농·겸업농·고용농 맞춤형 지원
- 공동영농 조직 육성 및 농업법인 취업 지원제도 도입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K-푸드 혁신성장,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 스마트팜, 농기계(자율주행, AI),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육성 및 수출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주요 어업재해인 이상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 및 대응연구 사업 확대
- 어선 폐업지원금 상향 및 폐업 수산물양식업 업종전환 지원
- 스마트양식 및 육상양식 보급 및 지원 확대
- 수산종자 및 양식어업 생산현장 장비, 기자재 스마트화 등 정부지원 추진
- 수산종자재해보험 도입과 자조금 사업 추진
- 청년어업인 귀어 정착자금 지원 및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
- 청년어업인 어구구입비, 역량강화(어선어업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지원
- 어민소득 안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인상
-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수산 선도 조직 육성사업의 지원품목 예산확대
- K-Seafood 수출 확대를 위한 유망 품종(김 수출) 및 비품종 경쟁력 향상 지원 확대
- 해양수산 어선원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선원 장기근속 방안 마련
-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섬 주민 교통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
- 폐어구 수거 어구보상금 상향 추진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 피해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12세 이하 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관리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자부담 단계적 축소 등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 처우개선 및 돌봄수당 확대 등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 정부·지자체 관리기능 강화 및 등록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초등학생 돌봄 확대 및 질 제고〉

-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다양한 특기적성·예체능·기초학력 프로그램 마련 등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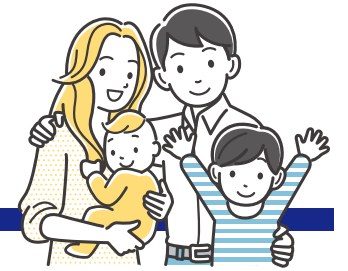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간·야간·단기 보호, 영양식 식사 지원 등 재가서비스 대폭 확충
-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방문진료-비대면 모니터링 연계 노인 질환 관리체계 구축,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및 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 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원(퇴소)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도심지역에 촘촘히 확충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확충

〈간호·간병 지원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거점병원 전면 확대로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확립
- 간병인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직접고용 등으로 간병의 질을 제고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 정부의 정기 임금 및 부모의 매칭 임금으로 성인기 학업·창업 비용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대출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

- 자녀양육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고려,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항체 건강보험 적용 추진
-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족친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돌봄서비스 특화 주택)
- 공공택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대상별 공약 12

-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물량 확대
- 민영주택 건설공급 시 9세 이하 자녀 있거나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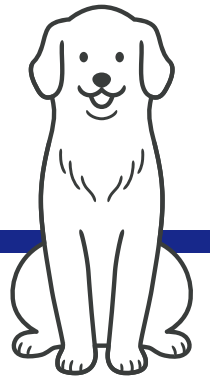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단계적 확대(현행 최초 2일만 지원)
- 난임시술 지원결정 유효기간 확대 및 중복회차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난임 조기 예방 남녀 기초검사 건강검진 확대,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국 광역단위 확충, 정서 안정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난임치료 부부 ‘부부 동행휴가제’ 확산 등 난임부부의 심리적 안정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복지시설 확충〉

-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 주도 하에 지역별 중장기 아동·청소년·노인 관련 복지시설 구조조정 및 확충 종합계획 수립
- 어린이집 등 기능 전환 희망 복지시설을 재가서비스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이나 마을도서관·키즈카페·돌봄센터·육아정보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로의 전환 지원

동물반려인

대상별 공약 13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 활성화
- 위탁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소 등 인프라 확충
- 동물 학대 범위 확대,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홍보 제한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및 동물복지 기준 마련·예산 현실화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적극 지원
-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및 민간 입양 지원 확대
- 퇴역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관리체계 확립
-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추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본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